https://doi.org/10.36034/yncdoi.2021..76.165

18세기 영남 '叛逆鄕'담론의 실상과 허상

김 백 철*

Ⅰ. 머리말
Ⅱ. 차별담론의 검토
  1. 다양한 차별론
  2. 영남 '반역향'의 등장
Ⅲ. 영남 출사자의 실상
  1. 영남인의 등과현황
  2. 영조-정조연간 등용책
Ⅳ. 가문중심주의 문제점
  1. 집단구조화의 맹점
  2. 당파성론 출현배경
Ⅴ. 맺음말

국문초록

경상도에서는 영남차별론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 영조 4년(1728) 무신란, 순조 원년(1801) 신유박해 등이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퇴출되는 계기로 제시되곤 한다.

그런데 경상도는 조선시대 500년간 과거급제자가 서울을 제외하면 부동의 1위이다. 또한 과거급제에 그치지 않고 출사로 이어진 비율도 높았으며 그중 고위직 비중도 적지 않았다. 남인이 때때로 탄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영남인이 그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영남 차별론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상대적인 기억

* 계명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sugaine@kmu.ac.kr

의 왜곡 현상이다. 여러 정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남 출사자가 감소하거나 중단되지 않았다. 심지어 세도정치기나 고종연간조차 영남인의 출사는 증가하였다. 이는 차별론의 시선과 전혀 다른 현실이다.

둘째, 과거 급제자 숫자의 일시적 변동이다. 18세기 영남 급제자 일부가 단기간에 감소하였고, 18-19세기 충청도와 평안도 숫자가 일시적으로 경상도를 앞서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 역시 남인 등용책과 더불어 기호지방 출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고 서북인 등용확대는 영남인 우대조치와 연동되어 등장하였으므로 영남차별과는 무관하였다. 오히려 공평한 인사정책과 지역균형 정책이 역설적으로 영남인 진출자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현재적 관점에서 지역차별을 논하면서 과거 역사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지방의 정치권에서 선거철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도가 지역차별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명현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 단지 서울을 꿈꾸기 때문에 욕망에 비례하여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 주제어
영남차별, 무신란, 당색, 가문, 기억왜곡

Ⅰ. 머리말

경상도 지역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영남차별론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人口에 膾炙되는 것을 넘어서 논문이나 저서에서도 간헐적으로 이같은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1] 여기에는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 영조 4년(1728) 戊申亂, 순조 원년(1801) 신유박해 등이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대거 퇴출되는 계기로 제시되곤 한다. 이후 남인은 "갑술환국이후 완전히 廢錮되어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거나 "무신란이후 반역향으로 낙인찍혀 차별받았다"거나 "신유박해이후 철저히 탄압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가 사실일까?

또한 차별을 언급할 때 종종 영남과 남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남인(지역)과 남인(정파)은 얼마나 동일시될 수 있을까? 양자의 연관성은 얼마나 입증가능한 것일까? 여기에는 상식처럼 자리잡은 '가문=학파=정파=지역'라는 도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역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차별론의 근거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둘째, 남인·영남인의 등용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

1) 영남탄압·반역향·영남차별·영남징계·남인견제·영남소외 등을 언급한 연구는 다음 참조.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영남의 정희량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2, 부대사학회, 1971, 80~81쪽;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564쪽;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1998, 120쪽;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중심이동』, 태학사, 2012, 331쪽;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41쪽; 정재용, 「18세기말-19세기초 의리문제를 둘러싼 안동지역 남인과 노론의 대립」, 안동대 사학과 석사논문, 2016, 1쪽; 손대현, 「윤기의 작품에 나타난 과폐비판의 양상과 근기남인의식의 형상화」, 『어문학』141, 한국어문학회, 2018, 170쪽; 채광수, 「1728년 무신난과 居昌 褒忠祠건립의 성격」, 『역사교육논집』70, 역사교육학회, 2019a, 209쪽; 김인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안동대 사학과 박사논문, 2019, 104쪽; 장유승, 『「필원산어』연구: 영남남인 정체성과 문학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20, 200쪽, 206쪽.

영남 정체성의 도식화과정에 대해서 재검토해고자 한다. 일련의 검토과정을 통해서 영남차별론의 실상과 허상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Ⅱ. 차별담론의 검토

1. 다양한 차별론

그동안 다양한 지역차별론이 제기되었다. 그중 호남차별론, 서북차별론, 영남차별론 등이 대표적이다.[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대중의 상식처럼 과연 지역차별론은 실재했던 것인가? 우선 학계연구 성과를 토대로 간략히 논점만 살펴보려고 한다.

1) 호남차별론 : 현재적 관점의 투영

「訓要十條」(942?)를 빙자한 호남차별론은 현대 각종 언론의 칼럼에서 주로 언급되어온 사안이다.[3]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4] 「훈요십조」자체의 타당성 논쟁이 고려시대 연구자들 중에서 오랫동안 이어졌다. 세상에 공개된 시점이 하필 왕건사후인가? 혹은 왕건의 최대 지지세력은 나주를 과연 차별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래서 차별론의 비판적 근거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①왕건사후

2) 차별 사례는 다음 참조. 김백철, 『왕정의 조건: 담론으로 읽는 조선시대사』, 이학사, 2021, 30~33쪽.

3) 강종규, 「칼럼: 깜짝쇼라도 보고싶다」, 『부산일보』, 2009.06.05.; 박병곤, 「칼럼: DJ가 YS와 손을 맞잡았더라면」, 『부산일보』, 2009.08.21.; 「칼럼: 이념갈등 들여다보면 가족사의 한풀이」, 『데일리안』, 2013.03.18.; 「칼럼: 자유시장 경제가 더 나은 사회통합 이룬다」, 『데일리안』, 2013.04.25.

4) 신복룡, 「신복룡교수의 한국사 새로보기: 훈요십조와 지역감정」, 『동아일보』2001.06.22.; 신복룡,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2001; 박종기, 「훈요십조 8조 근거로 현종 측근 위작설 주장」, 『중앙SUNDAY』321, 2013.05.05.;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5, 141~150쪽.

다른 가문의 경쟁심리가 강화되어 나타난 정치의식이거나 ②후백제 견훤의 중심지에 대한 견제발언으로만 이해하기도 한다. ③실제 등용된 인물이나 ④국난시 피난지 등을 검토하여 호남인물이나 지역이 주목받자 왜곡된 사료로 설명하기도 한다. 더욱이 ⑤고려나 조선에서 삼남지방은 곡창지대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차별 자체가 가능할 수가 없었다. 특히 ⑥전주는 조선 왕실의 연원으로 건국후 부윤(종2품)으로 승격되었고 慶基殿·始祖廟까지 세워졌는데 전통시대 차별지역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 군사정권의 선거전략에서 인구가 더 많은 경상도를 선택한 데에서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5] 지금의 가장 주관적인 시각이 역사적 사실에 투영되어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역사인용은 我田引水에 지나지 않았다.

2) 서북차별론 : 반정부운동의 여파

'洪景來의 난'(1811~1812)을 근거로 평안도인(서북인)[6]이 차별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주로 19세기를 민중운동사 시각에서 설명하면서 조선왕조를 '구체제'로 보는 관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7] 그러나 평안도는 중앙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비축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은 도인데다가 경상도와 더불어 대외무역을 관장하여 가장 부유한 지방이다.[8] 심지어 반역사건이 생기면 대부분의 도는 읍호가 강등되어 도명이 바뀌

---

5) 한홍구, 「한국민주주의와 지역감정: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역사연구』37, 역사학연구소, 2019, 687~701쪽.

6) '서북'은 평안도를 지칭하나 후대로 갈수록 함경도에서 황해도까지 영역이 확대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평안도로 한정하였고, 후술하는 와그너의 연구에서만 확장된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7)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233~330쪽.

8) 문광균은 경상도가 『부역실총』의 6도 중 가장 많은 재원을 지녔다고 분석하였다. 또 권내현은 평안도재정은 사신접대 및 군비에 쓰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중앙재정에서 흡수했다고 한다. 이 역시 역설적으로 재정의 여유가 생겨서 비축분 이관이 가능했을 것이다. 오수창 역시 농업발전 및 인구팽창을 설명하였다.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연구』, 민속원, 2019, 16쪽;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19쪽, 289~290쪽; 오수창, 앞의 책, 2002, 39~41쪽.

었는데도 불구하고[9] 오직 평안도·경상도만이 한번도 도명이 바뀌지 않았을 정도로 우대받았다.[10]

그럼에도 李重煥은 마치 태조의 유훈으로 서북인을 차별한 듯이 설명하였고,[11] 李家煥은 서북인이 잘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2] 하지만 역대 출사자 연구를 보면 다른 도에 비해 관직진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13] 특히 무과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이

9) 이성학, 「韓國古邑의 置廢 및 名號陞降: 變遷攷」, 『사회과학』3,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984, 111~112쪽; 임승표, 『朝鮮時代 賞罰的 邑號陞降制 硏究』, 홍익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1, 26~119쪽; 김세용, 「조선시대 읍호승강에 대한 일고찰: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림』42, 수선사학회, 2012, 117~144쪽; 김세용, 「조선후기 지방통치정책과 읍호승강: 17세기를 중심으로」, 『사림』46, 수선사학회, 2013, 167~193쪽.

10) 고을의 읍호가 내려가면 ①인구가 변동되고 ②과거응시에 영향을 받으며 ③행정변화에 따라 稅制도 바뀐다(임승표, 앞의 논문, 2001, 131~169쪽). 특히 道名변화를 감수하는 邑降에 해당할 때 평양은 불가하지만 나주는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평안도와 他道의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다(『宣祖實錄』卷22, 宣祖 21年 7月 乙卯/4日; 『仁祖實錄』卷46, 仁祖 23年 8月 乙巳/26日). 더욱이 함경도-함길도-영안도, 황해도-풍해도-황연도, 강원도-원양도-강양도-원춘도, 전라도-전남도-광남도, 충청도-충공도-청공도-공청도-공홍도-홍충도-충홍도 등에서는 감영이나 도명의 잦은 변동으로 행정상 혼돈이 심하였다. 그럼에도 평안도·경상도만 제외된 데는 ①도명을 이루는 평양·안주, 경주·상주가 반란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던 점, ②대외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었던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되어왔다.

11) 손혜리, 「한문학을 통해 되돌아보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 『한국한문학연구』76, 한국학문학회, 2019, 207쪽.

12) "上之十年, 余來守定州. 州有進士題名案, 取而考之, 自景泰庚午迄于今, 著名凡若干人, 注官者廑若干人. 噫, 天欲限之耶. 何爲賦其才, 使得成名. 國家欲錮之耶. 考絜令無之. 且上每當政注, 以收用西北人, 申戒至懇惻." 李家煥, 『錦帶詩文抄』「定州進士題名案序(定州進士題名案序)」.

13) 와그너의 서북인 문과급제 조사는 14세기말-15세기(0.3%), 16세기(1.4%), 17세기(7.5%), 18세기(14%), 19세기(15.4%)로 전제하고, 다시 고종대(22.8%)를 살폈다. 서북 3도(평안·황해·함경)의 인구비가 조선의 25%이고, 서울-경기 급제자가 50%인 점을 고려하여 서북인의 비중이 지방 내에서 2/5에 달한다는 가중치를 계산해냈다. 그리하여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서북인의 출사는 역전되었다고 주장했다. 단, 그의 범주는 19-20세기에 확대된 서북개념으로서 평안도뿐 아니라 함경도와 황해도를 포함한다. 에드워드 와그너(이훈상 역), 「사회완충제로서의 과거: 서북지역 사례 연구」,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54~72쪽.

며,[14] 문무과 급제자를 합쳐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15] 또한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역시 동일하다.[16] 따라서 평안도는 조선시대 무과급제자(9%), 문과 및 무과급제자(8%), 조선후기 무과급제자(13.8%) 등 3가지 척도에서 모두 수도권(서울·경기)을 제외하면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차별론을 주장하는 측은 우선 영남인과 마찬가지로 고위직 진출비중을 들고 있다.[17] 가장 부유하고 많은 과거급제자를 배출한 도가 차별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혹은 평안도 내에서도 몇 개 고을이 중심이 되었을 뿐 전체 도가 균등하게 등용되지 못하였음을 '차별'로 주장하기도 한다.[18] 하지만 그와 같은 '이상적인 기준'에 걸맞을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다. 문무과 급제와 관직진출의 절대치가 높은 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차별론의 근거사료를 살펴보면,[19] 특정지역 차별이라기보다는 현대

14) <표 1> 조선시대 무과급제자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기	평안	황해	경상	전라	함경	강원	충청	미상	합계
인원	8,957 (30%)	6,205 (21%)	2,792 (9%)	2,671 (9%)	2,199 (7%)	2,176 (7%)	968 (3%)	547 (1%)	1,495 (5%)	1,488 (5%)	29,49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2020.10.20. 검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5) <표 2>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자 통합 1-4위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기	평안	경상	전국급제자
인원	14,469 (32%)	6,970 (15%)	3,577 (8%)	3,531 (7.9%)	44,649

※ 전거: <표 1> 및 <표 5> 합계.

16) 조선후기(17-19세기) 무과급제자 조사에서도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평안도 2,279명(13.8%)으로 3위로 집계되고 있다.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역사산책, 2020, 212쪽.

17) 通淸이나 堂上 등 고위직 진출자가 적은 것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청」, 『한국문화연구』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45쪽; 손혜리, 앞의 논문, 2019, 218~220쪽.

18) 김선주(김범 역),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의 난』, 푸른역사, 2020, 72~74쪽.

19) "平西大元帥爲急, 急馳檄事. 我關西父老子弟公私賤, 咸聽此檄. 盖關西箕聖故城, 檀君蒼窟, 衣冠岌濟, 文物炳烺……朝廷之等棄西土, 不異於糞土. 甚至於權門奴婢, 見西人則必曰平漢其爲西人者. 豈不寃抑哉.……見今冲王在上, 權奸日熾, 如金祖淳朴宗慶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서울사람의 지방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서북인차별'은 홍경래 등이 반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선전이었을 뿐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족의 자부심이 높았던 평안도가 차별받았다면,[20] 다른 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굳이 차별에 가까운 사례를 찾는다면, 18세기 천변재이를 겪을 때 진휼자금을 평안도의 비축분에서 활용하면서 세금의 중앙이획이 촉진되었고 그로 인해 자율성이 상실되었다고 받아들이거나 평안도에서 무과보다 문과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본래 다른 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그동안 우대를 누렸던 것이다. 실제로는 일제강점기-광복전후 서북인이 상경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없던 소수들이 느꼈던 불안한 정서를 과도하게 조선시대까지 연원을 과도하게 소급해서 생긴 인식인 듯하다.[21]

3) 영남차별론 : 「평영남비」오인

현대에는 단편적인 기록을 근거로 삼아 전통시대 역사상을 상상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오랫동안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일성록』등 1차 사료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동시대 기록물은 열람에

輩, 專弄國柄, 仁天降災.……玆以檄文, 先諭列府群侯. 切勿撓動, 洞開城門, 以迎我師. 若有蠢爾頑拒者, 當以鐵騎五千, 蹙之無遺矣. 須速請命擧行宜當者." 『稗林』「純祖記事9」, 純祖 10年 12月 21日. 주로 '西土'나 '平漢' 등이 격문에서 사용되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어휘 자체만으로 차별적인지 의문이 있다. 혁명명분으로 사용되는 것과 실상이 같은지는 불명확하다. 인조대 "서토는 중흥의 기반이다"고 하였고(『承政院日記』, 仁祖 3年 10月 19日/甲午; 오수창, 앞의 책, 65쪽 재인용), '평한'은 글자대로는 '평양사람'이나 '평안도사람'을 가리킨다. 조선후기 법적 용어로 양인을 '常漢'으로 정의하였으므로(『속대전』), '漢'자체가 비칭은 아니다. 다만, 상한이 근대에 "상놈"(卑稱)이 되고 양반이 현대에 "이 양반"(2인칭)으로 바뀌듯이 사회적 신분의 변동으로 후대에 늬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20) 김선주 역시 평안도 사족의 급제자가 많고 부유한 지역으로 사족의 자부심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김선주,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국학연구』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136~137쪽.

21) 한홍구, 앞의 논문, 2019, 683~687쪽.

제한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종선총독부가 독점하였으며, 광복이후 영인·번역·전산화 등이 이루어지며 보급될 때까지 후대에 편찬된 단편적인 야사류에 기반하여 조선시대상을 이해해왔다. 이때 『연려실기술』(서인), 『당의통략』(소론), 『택리지』(남인) 등이 객관적인 자료처럼 대중화되었으나 사실은 모두 당색의 시각이 일정하게 들어있어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자료였다. 그중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인조반정이후 남인이 요직 진출제한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는데,[22] 이는 견제받는 남인 이미지의 최초서술로 보인다. 하지만 인조대 영남인의 등과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23] 실제로 현종-숙종대 예송논쟁을 거치면서 남인이 집권하였으므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민간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은 영조대 무신란(1728)이후 남인의 출사가 막혀서 수백년동안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기점을 위로는 갑술환국부터 아래로는 신유박해까지 연장해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는 없어진 「平嶺南碑」(정조4/1780)의 제목을 근거로 '영남평정을 기념한 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설명방식은 지역사회에도 퍼져있다.[24]

그러나 조선은 건국직후부터 전왕조의 수도(개경·평양·경주)나 왕실의 연고지(함흥·전주)에 府尹(종2품)을 설치하였다. 대체로 관찰사(종2품)가 동급의 부윤을 겸임하였는데, 오직 경상도만이 부윤과 관찰사로 분리되었을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절도사(종2품 병마절도사 2명, 정3품당상 수군절도사 2명)가 가장 많은 지역도 영남이다. 이는 고을이

22) 李重煥, 『擇里志』「人心」; 이중환(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141쪽.
23) <표 3> 인조대 경상도 문과급제자 현황

인조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인원	2	20	2	0	10	0	6	4	2	0	10	2	7	1
인조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합계
인원	1	5	12	0	0	3	0	1	1	13	0	13	4	119

※ 전거: 송준호·송만호 편저, 『조선시대 문과백서(상): 태조-인조』, 삼우반, 2008, 436~515쪽.

24) 조찬용, 『1728년 무신사태 고찰』, 아이올리브, 2003, 180~183쪽; 조찬용,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학고방, 2012, 363쪽.

70여읍에 달하여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명을 한번도 바꾸지 않은 도는 평안도와 경상도뿐이다. 이러한 거대한 도를 차별하고 국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이다.

더욱이 영조는 무신란이후 전국에 연좌제를 금지하였고,[25] 난의 주모자들이 다수 머물렀던 안동지역에 道臣(朴文秀)까지 보내어 특별사면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우대하였다.[26] 게다가 국왕은 무신란직후 직접 비망기를 내려서 "영남은 雄州이고 名賢의 고장인데" "정희량이 나온 것은 영남의 불행이며" "삼남은 국가의 근본이고 양남 중에도 영남이 가장 크다"고 공표하고 이어서 "영남의 말은 의당 믿어야 한다"고 무고한 연루자가 없도록 조처하였다.[27] 그리고 국왕은 의병장 柳升鉉과 부장 權萬까지 직접 인견하며 격려하였다.[28] 이러한 영조의 태도에 대해서 소론 姜必慶은 "번번이 영남이기 때문에 일체 버려두고 臺啓도 윤허를 아껴서 여러 사람이 半信半疑하는 어두운 지경에 섞어두어 天地 사이에 스스로 설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을 정도였다.[29] 심지어 金聖鐸 친국시에도 極律(사형)이 논의되자, 영조는 "나는 그가 영남인이므로 염려가 된다"고 관용을 베풀었다.[30] 여기에 노론 金在魯는 鞫廳전후로 영남사람을 놓아보낸 자가 많아서 영남에서 조정을 경시여긴다고 국왕을 힐난하였다.[31] 이는 영조가 영남을 차별하기는 커녕 지나치게 감싸고 돌았음을 보여준다.[32]

영조는 대구와 사적인 인연도 깊었다. 貞聖王后 徐氏는 처음 延礽君과

25)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癸未(3日).
26)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己酉(29日).
27)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壬寅(22日).
28) 『承政院日記』, 雍正 7年(영조5) 7月 20日(癸亥); 『承政院日記』, 乾隆 11年(영조22) 9月 16日(己酉); 이욱, 앞의 논문, 2011, 159쪽 재인용.
29) 『英祖實錄』卷18, 英祖 4年 6月 戊申(29日).
30)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乙卯(28日).
31)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6月 戊午(1日).
32) 이근호는 무신란이후 "以嶺南治嶺南"으로 영남의 독자성을 인정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17, 경북대 영남학연구원, 2010, 157~165쪽.

嘉禮 당시 達城君夫人에 책봉되었고, 부친(徐宗悌)은 훗날 達城府院君에 봉작되었다. 이는 바로 달성을 본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숙종대 重建된 대구 팔공산 把溪寺 圓通殿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는 불상 안에서 영조대왕 道袍가 발견되었고,[33] 숙종이 세자탄생을 기원하는 뜻에서 세웠다는 祈永閣에는 선조·숙종·덕종·영조의 위패가 모셔져있으며, 과거에는 숙종·영조·정조의 어필을 보관했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파계사를 영조(왕실)의 願刹로 보기도 한다.

英祖大王道袍(중요민속문화재220호) | 祈永閣(대구광역시문화재자료11호)

<그림 1> 대구 파계사 왕실 유물·유적

게다가 무신란 당시 책봉된 奮武功臣(揚武功臣) 중 친공신은 15명에 불과하여 역대 공신책봉자로는 최저 숫자인 반면에, 원종공신은 약 9천 명에 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하급관료나 양인·노비를 포함하는 지방민이 주류를 이루었다.[34] 조정은 중앙관료가 공신의 특혜를 챙기기는

33) 도포 안쪽에는 발원문("乾隆五年(영조16/1740)庚申十二月十一日服藏記, 聖上主甲戌生李氏(영조), 靑紗上衣一領, 萬世流傳于把溪寺者同家, 願吾上三殿誕日佛供處也.")이 꿰매져 있어서 영조와 파계사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34) 奮武功臣 1등 1명, 2등 7명, 3등 7명 등 15명이며, 奮武原從功臣 1등 1,034인, 2등 2,554인 3등 8,776인이다. 『奮武錄勳都監儀軌』<奎14935>; 『奮武原從功臣錄券』<奎1745>(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오갑균, 「분무공신에 대한 분석적 연구」, 『논문집』21, 청주교육대, 1984, 306~319쪽.

커녕, 전국적인 화합을 도모하였으므로 특정 지방에 '반역향'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35] 더욱이 이 비를 세운 시기는 세간의 선입견과 달리 영조대가 아니라 『교남빈흥록』(정조16/1792)으로 상징되는 영남인이 중용되던 정조연간이며,[36] 그 내용 역시 국왕이 무신란 당시 과로로 순직한 관찰사(黃璿)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조치였다.[37] 곧 '황선의 추모비'가 '영남의 정복비'로 둔갑한 것이다. 정조는 주지하다시피 태평성세에 武備를 강화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과거 전란에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인물을 발굴하여 褒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도 수백년간 잊힌 충무공의 사적을 발굴하여 『李忠武公全書』(정조19/1795)를 편찬하였기 때문이다. 무신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렸던 것이다. 한문을 읽을 수 있던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광복이후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자 제목만을 보고 내용을 오인한 탓인지 대구감영 앞에 있던 碑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 내용은 현재 『朝鮮金石文總覽』에 전한다.

---

35) 가장 이른 시기 반역향 개념을 제시한 사례는 「行狀」에 등장하는 "嶺南賊李麟佐鄭希亮等反"을 '영남반란'으로 평가한 것인데(『英祖實錄』卷127, 行狀, 4年 戊申 3月; 이수건, 앞의 책, 1995, 564쪽), 영조 4년 실록 기사에는 湖南賊, 湖西賊 등 도별로 '~賊'이라는 표현이 나올 뿐 아니라(『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乙亥/25日;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壬寅/22日), 행장에서도 전국반란 상황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첫구절만으로 영남반란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6) 이태진, 「정조의 『대학』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2, 256쪽; 이수건, 앞의 책, 1995, 538~548쪽.

37) 『正祖實錄』卷7, 正祖 3年 2月 癸亥(8日); 『正祖實錄』卷25, 正祖 12年 3月 癸亥(1日); "戊申春嶺南亂觀察使黃公督州郡兵討之. 踰月乃定. 其四月辛卯公卒于位, 朝廷錄其功累, 贈議政府左贊成兩館大提學. 謚曰忠烈公, 諱璿, 字聖在, 長水縣人.……然非公克平嶺亂, 國家事其殆矣……. 李宜哲撰·黃景源書, 「平嶺南碑」(正祖 4年 11月) 『朝鮮金石文總覽』(1913);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gsm.nricp.go.kr). 특히, 이근호는 민심순화책의 사례로 평영남비를 제시하였다. 이근호, 앞의 논문, 2010, 173~174쪽.

2. 영남 '반역향'의 등장

그렇다면 차별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실제 자료가 보여주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문제이다. 중앙의 자료와 지방의 인식은 어째서 차이가 생겼을까? 우선 영조-정조연간 논의되었던 두 가지 사안(김성탁상소·『무신창의록』)을 통해서 양자의 괴리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조대 김성탁의 이현일 신원상소

그동안 많은 영남남인 연구에서 영조대 金聖鐸 사건이 거론되어왔는데,[38] 이를 근거로 영남남인의 차별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상은 영조가 무신란이후 영남에서 변고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도 영남인의 등용을 정책화하기 위해 밀어붙여서[39] 등과후 3일만에 대간에 임명할 정도로[40] 왕명으로 가려뽑은 이가 김성탁이었다. 그가 출사한 후 다른 붕당에서 스승을 공격하자, 신원상소를 올려서 국왕의 노여움을 샀다.[41]

이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면, 숙종대 이현일은 인현왕후를 돕고자 상

38) 남하정(원재린 역), 『동소만록』, 2017, 400~403쪽; 김학수, 앞의 논문, 1998, 120쪽; 박경, 「18세기 기사남인의 복관작 청원을 통해 본 격쟁의 정착: 목래선, 이현일 후손들의 복관작 청원을 중심으로」, 『사총』86,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5, 64쪽; 백승호, 「정조연간 남인 문단과 지성인의 결속」, 『한국문화』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85쪽;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43쪽; 이재현, 「순조대(1800-1834) 안동지역 유림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전통문화』59,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119쪽; 도이힐러(김우영 외역), 『조상의 눈 아래서』, 너머북스, 2018, 585쪽; 최석기, 『조선후기 경상우도의 학술동향』, 경인문화사, 2019, 132~133쪽; 최우혁, 「정조-순조대 근기남인의 분화와 정치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90, 조선시대사학회, 2019, 279쪽; 장유승, 『「필원산어」연구: 영남남인 정체성과 문학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20, 203쪽.

39) 『英祖實錄』卷34, 英祖 9年 6月 戊午(9日); 『英祖實錄』卷36, 英祖 9年 10月 丙子(28日); 『英祖實錄』卷39, 英祖 10年 9月 庚寅(18日), 11月 丙子(5日); 『英祖實錄』卷40, 英祖 11年 閏4月 丙戌(17日).

40) 『英祖實錄』卷40, 英祖 11年 閏4月 戊子(19日).

41)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乙卯(28日).

소를 올렸으나 남인정권에서 폐위를 추진하던 마당에 중전에게 고상한 표현을 쓸 수는 없었다.[42] 그래서 갑술환국이후에도 오히려 名義罪人이 되었다.[43] 숙종도 본의가 구원이었음을 고려하여 완전한 신원까지는 아니지만 처벌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44] 경종 역시 復官을 시도했으나[45] 실현하기는 어려웠다.[46] 그러나 윤휴가 명성왕후 김씨를 비방했다가 사약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47] 국왕이 왕실모욕에 대해서 선왕(숙종-경종)의 판부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영조는 인현왕후의 법적 아들이며[48] 복위과정에서 출생하여 私親이 숙빈으로

42) 이현일의 상소가 숙종대는 ①인현황후를 "도리에 순응하지 않아서 하늘을 스스로 끊었다"고 지칭한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추가로 영조대는 ②嫡庶구분을 강조한 문구가 국왕과 황형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여 왕의 분노를 샀다. "廢妃閔氏, 弗循壺彝, 自絶于天……蓋彼以六禮所聘, 定位中宮, 奉承至尊, 殆將十年." 『肅宗實錄』卷21, 肅宗 15年 9月 丁巳(24日); 『肅宗實錄』卷26, 肅宗 20年 5月 戊申(11日), 閏5月 丁丑(11日); 『肅宗實錄』卷27, 肅宗 20年 6月 丁巳(21日), 8月 乙卯(20日); 『肅宗實錄』卷33, 肅宗 25年 5月 癸酉(4日); 『肅宗實錄』卷35, 肅宗 27年 5月 丁未(21日);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乙卯(28日), 6月 己未(2日); 남하정(원재린 역), 『동소만록』, 2017, 398~400쪽; 김학수, 앞의 논문, 1998, 120쪽;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운동과 추숭사업」, 『대구사학』117, 대구사학회, 2014, 9~10쪽; 박경, 앞의 논문, 2015, 61쪽.

43) 『肅宗實錄』卷26, 肅宗 20年 4月 戊寅(11日).

44) 우선 배소의 圍籬를 철거하고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肅宗實錄』卷31, 肅宗 23年 閏3月 癸巳(13日), 4月 癸酉(24일); 『肅宗實錄』卷33, 肅宗 25年 2月 甲辰(4日); 『肅宗實錄』卷35, 肅宗 27年 5月 丁未(21日); 『肅宗實錄』卷40, 肅宗 30年 11月 己亥(3日).

45) 『景宗實錄』卷2, 景宗 卽位年 12月 甲午(2日); 『景宗實錄』卷4, 景宗 元年 6月 壬辰(2日).

46) 『景宗實錄』卷2, 景宗 卽位年 12月 庚戌(18日); 『景宗實錄』卷4, 景宗 元年 6月 乙未(5日).

47) 윤휴는 갑인예송이후 명성왕후에게 "管束"을 사용했다가 기사환국이후 처벌받았다. 경신환국이후 복관되었다가 갑술환국이후 다시 추탈되었다. 순종대가 되어서야 복관되었다. 『肅宗實錄』卷3, 肅宗 元年 4月 己丑(1日); 『肅宗實錄』卷4, 肅宗 元年 11月 戊子(4日); 『肅宗實錄』卷9, 肅宗 6年 4月 丙戌(27日); 『肅宗實錄』卷20, 肅宗 15年 3月 壬申(5日); 『肅宗實錄』卷27, 肅宗 20年 6月 戊午(22日); 『純宗實錄』卷2, 純宗 元年 3月 21日(양력), 4月 30日(양력).

48) 「行狀」에는 영조와 인현왕후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 시절 고사가 실려

책봉되고 왕세제가 되었다. 또한 그는 이현일이 嫡庶구분을 언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분개했다. 곧 자신의 존재명분과 선왕들의 판부까지 바꾸면서 이현일을 신원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김성탁은 이현일의 門徒이므로 신원상소를 올린 행위가 향촌사족으로서 당연한 행동일지 모르겠으나, 중앙정계에 출사한 관료의 행동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친국과정을 보면 영조는 이미 "이현일의 상소가 惡逆을 범했다"고 보았는데,[49] 김성탁은 인현왕후 민씨를 폄하한 문구를 제외하고 문제가 없는 상소문만 외워서 증언하였으므로 이 역시 비호하는 행위로 비난받았다. 그러자 그는 이현일이 田里에 放歸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수학했다며 역률을 범한 情狀은 나이가 어려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조정에서 일어난 논란도 잘 알지 못한다고 면피하려고 하였다.[50] 이는 영조대 오광운, 정조대 채제공, 고종대 류후조 등이 隱忍自重하며 중앙정계 논의에 신중히 참여하면서 자파를 보호하고 남인의 출사기회를 확대시킨 행보와 무척 대비된다.[51] 향촌사회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 스승'을 신원하겠다고 상소를 올려서 사단을 만들고 난 뒤에 조정에서 실제 이현일의 상소 원본을 확인시켜주자, 왜곡된 진실을 그제서야 알았다고 변명하였다.[52] 이는 지나치게 지역사회 논리에 매몰되어 중앙정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있을 정도이다. "方五歲, 手撷禁苑百種花, 爲酒以獻后. 后歎曰, 孝悌固所性, 何其夙就也." 『英祖實錄』卷127, 行狀.

49)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己酉(22日).

50)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乙卯(28日).

51)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4, 95~108쪽, 165~173쪽; 원재린, 「영조대 후반 소론-남인계 동향과 탕평론의 추이」, 『역사와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85쪽, 88~93쪽, 94~96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114~117쪽.

52) 상소문은 현재 『公車文』, 文集, 『承政院日記』, 實錄 등에 남아있는데, 『공거문』은 접수 대장이므로 원문에 해당하고, 『승정원일기』나 실록은 편집하여 요약된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에 문집은 전문이 실린 듯하지만, 개인이나 가문에 불리한 내용이나 표현은 삭제되거나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문인이나 후학은 절반의 진실만을 전해듣곤 한다.

현상이었다.[53]

영조가 김성탁을 영남산림으로 극진히 대우했기에[54] 영남사류는 과도한 은혜로 기회가 생겼다고 오판한 듯하다. 그러나 정작 경상도 내에서 유생(進士)이 노론의 당론을 따르며 그를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55] 이같은 행보는 모처럼 영남인의 출사길이 열리고 있는 찰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고, 그를 추천한 소론신료도 타격이 불가피했다.[56] 결국 영남사류는 노론이 소론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될 뿐이었다. 노론-소론의 대립구도를 타파하고자 했던 국왕의 탕평정책 역시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노론신료는 영남 전체로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하려 했다.[57]

김성탁은 국왕이 파격적인 특전을 베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선대의 일을 정치투쟁에 사용했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영조는 등용시 김성탁에게 당부했던 당론금지를 깨뜨렸다고 분노해했다. 김성탁은 절도에 안치되었다가 석방되었다.[58]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53) 南夏正 역시 영조연간 남인계를 이끌었던 吳光運의 대탕평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계의 흐름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하정(원재린 역), 『동소만록』, 2017, 412~415쪽; 유봉학, 「18세기 남인 분열과 기호 남인 학통의 성립: 『동소만록』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1, 한신대 출판부, 1983, 9쪽; 원재린, 「『동소만록』에 반영된 남하정의 정국 인식」, 『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102~103쪽.

54) 【1차】 영조 10년 9월 參奉(종9품)→11월 司畜署 別提(종6품)→ 【2차】 영조 11년 윤4월 13일 增廣殿試 6품관→19일 사헌부 持平(정5품)→12월 7일 사간원 正言(정6품)→ 【3차】 영조 13년 1월 6일 知製敎→4월 17일 홍문관 副修撰(종6품)→5월 11일 홍문관 校理(정5품). 『英祖實錄』卷39, 英祖 10年 11月 丙子(5日), 戊寅(7日), 辛巳(10日); 『英祖實錄』卷40, 英祖 11年 2月 庚午(29日), 閏4月 壬午(13日), 丙戌(17日), 7月 丙辰(19日);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9月 壬辰(1日); 『英祖實錄』卷43, 英祖 13年 1월 乙未(6日), 4月 乙亥(17日); 안장리, 『조선국왕 영조 문학연구』, 세창출판사, 2020, 149~150쪽.

55)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8月 辛巳(20日).

56)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7月 丙午(20日), 己酉(23日), 壬子(26日), 癸丑(27日).

57)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7月 丁亥(1日).

58)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6月 己未(2日); 『英祖實錄』卷56, 英祖 18年 11月 壬午(27日).

영조가 다른 붕당에도 동일하게 했던 조치였다.[59] 국왕은 탕평의 大義 앞에 붕당의 투쟁명분을 세우는 자는 용납하지 않았다.[60] 그런데도 그동안 이를 이현일의 신원이라는 대의를 실현시키려는 숭고한 선비와 탄압하는 적대세력인 노론일당으로 서술해왔다. 오히려 김성탁사건으로 인해 탕평을 적극 추진한 영조는 당분간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으며, 국왕을 뒷받침해온 소론신료도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동안 왕정사회에서 군주의 입장이나 정책의지는 너무 간과해왔으며, 향촌사족의 행동은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순수한 의도만이 강조되고 미화되어왔다.

2) 정조대 이진동의 『무신창의록』

정조 12년(1788) 영남 유생 李鎭東이 무신란 당시 안동 등 13읍이 의병 소집에 응한 내용을 『무신창의록』을 편찬하여 바쳤다. 국왕은 무신란 60주년에 포상하는 전례를 언급하며 간행과 포장을 검토했다. 초기에는 책자간행 수준에서 지방 유생을 격려하자는데 신료들이 동조하였다.[61] 그러나 내용을 검토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예조를 필두로 영의정 김치인 및 좌의정 이성원 등은 영조대 죄적에 등록된 인물(金聖鐸·趙德鄰·黃翼再·權榘)이 의병으로 등재되었고, 別錄은 公私문서가 없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조정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처벌을 주장했다.[62]

문제가 된 인물 중 김성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산림으로 지극한 우대

59) 노론계 산림 朴弼周도 정성들여 기용했으나 정치투쟁에 나서자 바로 등용하지 않았다. 『英祖實錄』 卷64, 英祖 22年 9月 丙申(3日); 김백철, 『두 얼굴의 영조』, 태학사, 2014, 101~102쪽.

60)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 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3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23~25쪽; 김백철, 「『천의소감』의 서사구조와 명분론」, 『천의소감』, 한국고전번역원, 2017, 26~42쪽.

61)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丙寅(8日).

62) 『무신창의록』본문은 고을별로 座目, 軍門日記, 軍門節目, 通文, 檄文 등이 모두 실려 있으나 별록에는 명단만 있어 근거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戊辰(10日).

를 받다가 이현일 신원상소를 올려서 친국을 받고 絶島에 유배되었으나 왕의 분노가 가라앉은 뒤 圍籬가 풀리고 육지로 옮겨졌다가 석방되었다.[63] 조덕린은 무신란 당시 소모사로 활약하여 승차했다가 상소를 올려서 "正名"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론으로 의심받아 친국까지 당하였으나 불명확하다고 하여 석방되었다.[64] 황익재 역시 박사수의 추천으로 소모사가 되어 무신란 진압에 참여했다.[65] 그러나 이전부터 김일경의 유배길에 마중하여 재물을 건낸 죄가 거론되었고,[66] 역적 이인좌나 조세추의 공초에서 황익재의 역모연루가 언급되었다.[67] 서울로 잡혀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다.[68] 이때에도 영조는 다른 영남인의 조사는 금지시켰다.[69] 또한 權榘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닌 이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모두 역적의 초사에 등장하여 의심을 받은 인물인데,[70] 무신란이후 영조의 비호하에 무마되어 석방된 경우이다.[71] 이들의 공통점은 영남의 공론을 대변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정치투쟁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경계 대상으로 인식되어 국문을

63) 『英祖實錄』卷47, 英祖 14年 5月 癸酉(22日), 6月 辛丑(20日); 『英祖實錄』卷56, 英祖 18年 11月 壬午(27日).
64)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8月 辛巳(20日), 甲申(23日), 戊子(27日), 9月 甲午(3日), 壬寅(11日).
65)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壬申(22日);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甲申(4日), 丙戌(6日); 黃翼再, 『華齋集』卷5, 素患錄, 戊申日記.<奎 15585>(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66) 『英祖實錄』卷5, 英祖 元年 4月 丙子(9日).
67)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丙子(26日);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丙申(16日).
68) 『英祖實錄』卷27, 英祖 6年 8月 辛丑(5日).
69) 『英祖實錄』卷26, 英祖 6年 6月 壬寅(5日).
70) 안동의 權榘, 權德秀, 權萬, 黃翼再, 金敏行, 柳夢瑞 등이 정희량의 姨從 김홍수나 이인좌의 아우 이웅좌와 교분이 있어 반군의 포섭대상이었는데 의병명단에도 수록되어있다. 『戊申倡義錄』卷1, 安東義兵軍門座目<한古朝78-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담론』65, 호서사학회, 2013, 327~329쪽;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원인」,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236~238쪽.
71) 『英祖實錄』卷19, 英祖 4年 9月 戊午(11日).

받았다가 왕명으로 풀려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번 상처입은 명예로 인해 간행과 포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 역시 영남남인은 노론세력의 방해공작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정작 『무신창의록』에는 1,213명[72]이 기록되어있으나 이들이 소집에 응했을 뿐 한번도 직접 전투를 치룬 적이 없으며 곧바로 소집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73] 이미 영조연간 호남과 영남에 전공을 세운자를 조사하여 포상조치가 시행되었다.[74] 『호남창의록』에는 실제 무신란 당시 전투를 치룬 의병들이 기재되어있으나 그중에서 受勳된 인물은 30명으로 제한적이다.[75] 원종공신이 약 9천명에 달하는데도,[76] 호남에서 전투에 참여한 모든 의병이 포상을 받지는 못했다. 심지어 영조연간에는 경상도 관군의 전투를 총지휘한 관찰사 황선이 과로로 순직했음에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을 정도로 공적심사가 엄격히 실시되었다. 대부분 의병 중에서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거나 관군에 종군한 사람들(李述源자손)에게 포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투 경험도 없는 幼學 9백여명을 기재해와서 포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조정 신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용납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77] 영남남인을 지지하던 채제공만이 간행만 하는 형태로

72) 정조대 본문에는 13읍 1,014명, 별록에는 31명, 고종대 속별록·추록에는 168명이다. 정조연간 기준으로는 1,045명이다. 고수연, 앞의 논문, 2013, 312~313쪽.

73) 『戊申倡義錄』卷1, (安東義兵)軍門日記·(尙州義兵)軍門日記·(禮安義兵)軍門日記; 『戊申倡義錄』卷2, (醴泉義兵)軍門日記·(榮川義兵)軍門日記·(順興義兵)軍門日記·(豐基義兵)軍門日記; 『戊申倡義錄』卷3, (永川義兵)軍門日記·(義城義兵)軍門日記·(英陽義兵)軍門日記·(奉化義兵)軍門日記·(眞寶義兵)軍門日記·(龍宮鄕校)倡義日記; 『戊申倡義錄』卷4, 追錄, (新寧義兵)軍門日記·(靑松義兵)軍門日記·(聞慶義兵)軍門日記·(咸昌義兵)軍門日記·(義興鄕校)倡義日記<한古朝78-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4250-61>(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42, 고려사학회, 2011, 144~151쪽; 고수연, 앞의 논문, 2013, 326쪽.

74)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戊子(8日).

75) 고수연, 같은 논문, 2011, 51~52쪽; 황재문, 「1728년 무신란 관련 문헌의 재검토」, 『국문학연구』40, 국문학회, 2019, 214쪽.

76) 오갑균, 앞의 논문, 1984, 306~319쪽.

사족을 격려하자고 원론적인 지지입장을 밝혔을 뿐이고,[78] 노론신료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 응대로 보인다. 더욱이 무신년(영조4/1728) 국청에서 공초에 언급되었거나 선왕대 처벌받은 인물을 의병명단에 넣어서 포상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영조는 이미 안동사족에게 무신년 당시 국청에서 언급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면죄부를 주었는데도 왕이 바뀌자 포상까지 요구한 것이다. 영남유생은 이번에 모든 것을 만회하려고 한 듯하다. 嶺南安撫使(朴師洙) 휘하 號召使(趙德鄰)·召募使(黃翼再)의 소집에 응한 의병 모두에게 포상뿐 아니라, 罪籍에 들어 있던 인사까지 한번에 신원하려고 한 것이다.

현존하는 『무신창의록』에는 흥선대원군이 발탁한 영남출신 좌의정 류후조의 서문이 실려있는데, 이때(고종12/1875) 정식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도 지극히 영남지역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조가 이진동에 대해 "재상의 그릇(宰相之器)"이라고 찬탄했다거나[79] 왕명으로 무신란의 전공자 조사를 명했으나 도신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간행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일성록』에 유사한 기록이 보이지만,[80] 후자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수록명단 중 안동의 김성탁, 榮川의 나학천 등은 이미 영조대 무신란이후 기용되었다.[81] 또 조정에서는 殉節한 경상도 거창좌수 李述源의 후손도 녹용하였다.[82] 정조연간에도 안동지역(柳升鉉

77) 『무신창의록』에는 幼學 1,046명(본문 897명, 추록 149명) 및 業武 5명(본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전직 관료의 비중은 대단히 낮으며, 進士나 生員조차가 희귀하다. 원종공신의 책봉범위를 참고해볼 때 官銜을 띤 이들은 대부분 관군에 합류한 듯하다. 정조대 올린 판본에는 유학·업무가 902명이였다. 『戊申倡義錄』<한古朝78-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78)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戊辰(10日).

79) 柳厚祚, 「序」(고종11) 『戊申倡義錄』(卷首)<한古朝78-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0) 정조는 실제 "有宰相風儀"라고 하였다. 『日省錄』, 戊申(정조12) 11月 16日(甲戌).

81) 무신란이후 이미 관직이 있던 나학천은 승지·병조참의(정3품당상)까지 승진하였고, 본래 관직이 없던 김성탁은 특별과거와 파격적인 승차를 통해 홍문관수찬(정6품)까지 기용되었다. 『英祖實錄』卷22, 英祖 5年 5月 乙巳(1日); 『英祖實錄』卷29, 英祖 7年 2月 庚申(27日); 『英祖實錄』卷44, 英祖 13年 5月 戊戌(11日).

82) 『英祖實錄』卷36, 英祖 9年 12月 丁卯(20日); 『英祖實錄』卷40, 英祖 11年 2月 乙卯(14日).

·權萬) 의병에 대한 포장을 단행했다.[83] 심지어 『무신창의록』간행이 좌절된 직후에도 정조는 무신란에서 소모사나 호소사[84]로 활약한 조덕린과 황익재의 죄명을 蕩滌해주었다.[85] 그런데도 포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중앙과 향촌 사이에 기대치의 차이로 보인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정조가 만들게 한 『嶺南人物考』(정조22/1798)에 대해서도 19읍[86]만 대상으로 하여서 경상도 70여읍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소외론을 주장해왔다.[87] 그러나 전국단위 『인물고』나 『국조인물고』에서 2천여명을 수록했는데 지역단위에서 경상도만 별도로 6백여명을 추가로 선별했다면 이 자체가 특혜일뿐더러 이미 전국단위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이다.[88]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을을 지니고 있고 사족자원이 풍부한 경상도를 기준으로 모든 고을을 상세히 수록하면 역설

83) 이성원은 "13고을 중 안동이 으뜸인데, 안동의 上將[大將](류승현)과 副將(권만)에게 이미 금년 봄에 특별히 작질을 높여 관직을 追贈(이조참판·참의)하는 명을 내렸다"고 지적하였는데(『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戊辰/10日), 실제 두 사람의 의병활동 및 포상기록은 영조연간 및 정조연간에도 교차 확인된다(『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丙戌/6日; 『正祖實錄』卷25, 正祖 12年 4月 丁酉/5日).

84) 영조연간에는 소모사가 혼용되고 있으나 정조연간 『무신창의록』이후 호소사·소모사를 구분하려는 듯하다. 『日省錄』, 戊申(정조12) 11月 10日(戊辰).

85)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戊辰(10日); 『日省錄』, 戊申(정조12) 11月 10日(戊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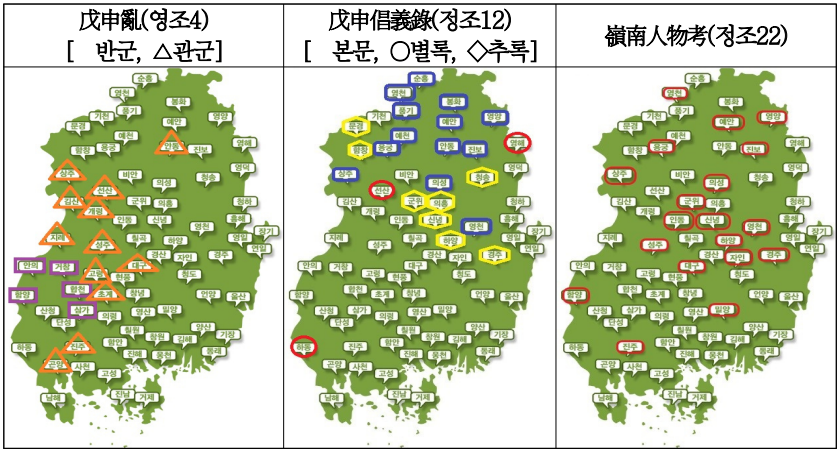
86) 『영남인물고』권1-3는 안동, 권4는 상주(1), 권5는 상주(2)·예안·군위·영양, 권6은 경주·밀양·신령, 권7은 성주·의성, 권8은 진주·함양·자인, 권9는 永川·대구, 권10은 榮川·용궁·하양·진보 등이 반영되었다.

87) 이수건, 앞의 책, 1995, 548쪽.

88) 정조연간 전국단위 『인물고』(1,817명)나 『국조인물고』(2,065명)가 편찬되었고, 지역단위 『영남인물고』에는 19읍이 수록되었는데 판본별로 인원수는 상이하다(다음백과 515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33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41명, 강주진 578-655명, 이수건 655명). 전자의 전국단위는 주제별/서인위주로 수록되었고 후자의 지역단위는 고을별/남인위주로 수록되었다. 이성무, 「국조인물고해제」, 『국조인물고』상, 서울대출판부, 1978, 6~7쪽; 강주진, 「서문」, 『영남인물고』, 탐구당, 서울대출판부, 1978, 3~5쪽; 이수건, 앞의 책, 1995, 548쪽; 신승운, 「조선조 정조명찬 인물고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1987, 83~85쪽; 「영남인물고해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자판); 「영남인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전자판); 「영남인물고」, 『다음백과』(전자판).

적으로 사류가 변변치 못한 다른 도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19읍 중 상당수는 『무신창의록』에 등장하는 고을이다.[89] 곧 양자가 중첩되는 고을은 본문 중 안동, 상주, 예안, 영양, 의성, 永川, 榮川, 용궁, 진보, <추록追錄[90]> 중 군위, 경주, 신령, 하양> 등 13읍이다. 『영남인물고』의 수록범위는 무신란 당시 북부의 의병지역이 중심이 되었고 남부의 관군지역(성주·대구·진주)을 비롯하여 일부 대읍이 추가되었으며 심지어 반군에 가담한 지역(함양)까지 포함시켜 최대한 지역통합과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그림 2> 무신란·『무신창의록』·『영남인물고』 고을 비교

특히 『영남인물고』에는 무신란 당시 의병 권구(안동)·류승현(안동)·권

89) 『무신창의록』에는 본문 권1-3에는 안동, 三溪書院, 道淵書院, 상주, 예안, 예천, 榮川, 순흥, 풍기, 永川, 의성, 영양, 봉화, 진보, 龍宮鄕校 15곳(13읍)이 실려있다. 권4의 별록에는 안동*, 상주*, 선산, 예안*, 榮川*, 예천*, 영해, 하동이 실렸으며(*중복고을), 속별록에는 안동*, 선산*, 추록에는 신녕, 청송, 문경, 함창, 의흥향교, 군위향교(경주, 하양, 의흥홍씨) 등 6곳이 본문형식에 맞추어 추가되었다.

90) 단, 본문(권1-3)·별록(권4)은 정조연간에, 속별록(권4)·추록(권4)은 고종연간에 각기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고수연, 앞의 논문, 2013, 325쪽.

만(안동)·김성탁(안동)·황익재(상주)·조덕린(영양) 등의 업적이 상세히 수록되어있으며, 또한 권상일(상주) 역시 무신란 당시 만경현령으로 있으면서 邊山賊을 탐문한 공로가 상세히 수록되어있다.[91] 전술한 바와 같이 권구·황익재는 역적의 초사에 언급되었으며, 김성탁·조덕린은 상소를 올려서 정치투쟁으로 간주되어 명의죄인으로 죄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만회한 것이다.

『무신창의록』이 ①罪籍에 실려있는 인물 문제, ②실제 전투를 치르지 않은 상황, ③대부분 뚜렷한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유학을 9백여명이나 대상자로 삼은 문제, ④별록에는 근거 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명단만 올려서 공적을 부풀린 문제 등이 있어 처음 올렸을 때에는 간행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영남을 부양하기 위해 『영남인물고』를 별도로 편찬하여 다른 형태로 명예를 보존시켜주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영남의 모든 인물을 게재하고 싶겠으나 중앙에서는 조선초부터 지방 인물수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을 정도로 별반 관심이 없었다.[92]

결과적으로, 대규모 명단과 고을단위 행적만 수록된 『무신창의록』에 비해서 名賢을 선별하는 『영남인물고』에 등재되는 것이 훨씬 더 향촌사족에게 영광이었을 것이다. 정조는 일부 인물에 대한 포장(류승현·권만), 신원(조덕린·황익재·김성탁), 陶山書院의 試士 및 『嶠南賓興錄』간행, 주

91) 『嶺南人物考』卷3, 安東(3); 『嶺南人物考』卷5, 尙州(2); 『嶺南人物考』卷5, 英陽; 강주진 역, 앞의 책, 1978, 166~167쪽, 172~175쪽, 170-171쪽, 266~269쪽, 319~322쪽.

92) 세종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아예 인물을 비롯한 문화정보가 거의 없으며 지방통치에 필요한 정보만이 수록되었다. 또 영조대 『여지도서』편찬시에도 통치정보를 수집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각 지방에 과도한 문화정보를 지양했으나 경상도만이 인물이나 시문을 대거 수록하였을 정도로 대단히 예외적인 행동을 보여왔다. 물론 사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성종~중종연간 『신증동국여승람』가 있으나 지역별 문화정보가 가득한 반면에 민감한 통치정보는 삭제되어있다. 이는 양자의 편찬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慶尙道」, 『輿地圖書』下, 국사편찬위원회, 1973; 김백철, 「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 『규장각』4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282~284쪽.

요 고을(13읍)의 『영남인물고』편찬사업까지 단행하여 영남에 대한 최선의 우대를 베풀었다.

Ⅲ. 영남 출사자의 실상

1. 영남인의 등과현황

민간에는 영남차별의 시각이 보편화되었으나 실제 조선시대 영남인의 등과현황을 보면 경이롭기만 한다. 첫째, 『문과방목』과 『무과방목』을 통해 영남인의 급제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토록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상도는 조선시대 지방 문과급제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93] 영남보다 급제자가 높은 지역은 오직 한성뿐이다. 심지어 문과급제자는 정기시가 36.6%인데 반해 비정기시(增廣試·別試·廷試·謁聖試·親試·外方試·春塘臺試)는 63.4%였으므로[94] 일정한 우대 속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문과급제자가 중요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중 대부분이 실제 출사로 이어져서 참상관이나 당상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95] 이는

93) <표 4>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지역별 분포

지역	서울	경상	충청	전라	평안	경기	함경	강원	황해	미상	합계
인원	5,512 (36%)	1,332 (8%)	998 (6%)	820 (5%)	785 (5%)	765 (5%)	194 (1%)	235 (1%)	134 (0.8%)	4,176 (27%)	15,15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2020.10.20. 검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단, 영남의 급제자를 이원명은 1,750명, 김인호는 1,766명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본고의 조사(1,332명)보다 많이 찾아냈다.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102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28쪽, 33쪽.

94)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22~23쪽.

95) 원창애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14,684명 중 당상관(37%), 참상관(53%), 참하관(4%), 미진출자(6%)로 집계하였다. 김인호는 영남 문과급제자 중 최고관직 파악이 가능한 1,749명을 대상으로 당상관 379명(21.7%), 참상관 1,233명(70.5%), 참하관 137명(7.8%)으로 집계하였고, 그중 1품 31명(1.7%), 2품 177명(10%)을 분석하였다. 원창애, 「문과방목에 담긴 양반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시민강좌』46, 일

세간에서 급제와 출사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문무과를 합쳐도 평안도 다음으로 많은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96] 이같은 실적이 조선전기에 집중되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영남 거주지로 확인되는 문과급제자를 다시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나누어보면, 전자가 572명(42%), 후자가 760명(57%)에 달하여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초과거 시행시점부터 갑술환국 직전해(1393-1693)까지 301년간 연간 1.89명이 급제한데 반해, 갑술환국부터 최종과거 시행시점(1694-1894)까지 201년간 연간 3.78명이 급제하였다. 이는 갑술환국이후 영남인이 폐고되기는 커녕 연간 두배나 더 많은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도 거주 문과급제자는 갑술환국이후 숙종후반-영조초반 92명이 등과하였고, 무신란이후 영조전반-정조연간 188명, 신유박해이후 순조-고종대 481명으로 지속적으로 급제자를 배출하였다.[97] 더욱이 갑과 1-3위, 을과 1-2위, 병과 1위 등 壯元, 亞元, 探花郎 80명을 배출하였는데, 숙종후반부터 고종대까지 고르게 나타난다. 또한 장원이 무려 22명에 달한다.[98] 이는 그동안 서인·노론이 科擧에서 영남남인의 진출을

조각, 2010, 113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194쪽.

96) <표 2> '조선시대 문무과 급제자 통합 1-4위 지역별 분포' 참조.

97) <표 5> 조선후기 경상도 문과급제자 왕대별 현황

왕대	숙종 20-46	경종	영조 1-3	영조 4-52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합계
인원	56	12	24	91	97	146	71	78	185	76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2020.10.20. 검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98) <표 6> 숙종후반-고종연간 영남 문과 상위급제자 현황

등급	총수	숙종 20-46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갑과1위 壯元	22	1		2	3	1	5	2	8
갑과2위 亞元	11	1			3	1	1		5
갑과3위 探花郎	16	3	1	1	3	2	1		5
을과1위 아원	17			1	2	1	4	1	7
을과2위 탐화랑	11			1		3	2	2	3
병과1위 탐화랑	4						2	1	1
누계		5	1	5	11	8	15	6	29

막고 있다는 주장[99]과는 전혀 다른 실상이다.

둘째, 『都堂錄』을 통해서 玉堂의 진출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동안 등과는 했으나 출사는 하지 못했다거나 출사했어도 고위직에 가지 못했다는 주장도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홍문관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경상도가 4위에 달하는데 서울을 제외하면 2-4위까지 모두 8-10%대로 분포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100] 홍문관은 주지하다시피 청요직 중에 가장 명예로운 관직이다. 대부분 옥당을 거쳐서 고위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셋째, 갑술환국이후 영남의 6개 가문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관직 진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101] 관직의 품계에 따라 분류해보면, 출사자 중 당상관 39%, 참상관 50%, 참하관 10%로 나타난다. 심지어 당상관 중에는 1품관 2명, 2품관 21명이 포함되어있다. 이들의 출생년은 18세기

※ 단, 과거응시자 수에 따라서 아원과 탐화랑의 순위는 가변적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2020.10.20. 검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99) 이수건, 앞의 책, 1995, 564쪽; 김성우, 앞의 책, 2012, 331쪽; 우인수, 앞의 책, 2015, 41쪽; 손대현, 앞의 논문, 2018, 170쪽; 장유승, 앞의 논문, 2020, 206쪽.

100) 정조-고종연간 『도당록』입록자의 거주지가 서울 61.8%(1위), 경기 10.6%(2위), 충청 9.6%(3위), 경상 8.8%(4위), 전라 2.9%(5위), 강원 1.6%(6위), 평안 1.1%(7위), 함경 0.3%(8위), 황해 0.3%(9위) 등으로 집계된다. 차장섭,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154~155쪽.

101) 河謙鎭의 『慶尙道案』(1944)에서 294개 본관성씨 중 眞寶李氏, 瑞興金氏, 豐山柳氏, 安東權氏, 義城金氏, 驪江李氏 등 비교적 많은 인물을 수록한 상위가문을 대상으로, 갑술환국(숙종20)이후 관직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혹은 신규 출사한 사람(155명)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비과거출신도 포함하였다. 단, 출사시기는 생년과 같은 왕대이거나 다음 왕대이다.

<표 7> 영남 6대 가문의 숙종후반(숙종20)-고종대 출사자 현황

품계	<대신> (1품)		<재신> (2품)	당상관 (1품-정3품상계)			참상관 (정3품하계-6품)		참하관 (7-9품)		
인원	<2>		<21>	61(39%)			78(50%)		16(10%)		
출생년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19세기
인원	2	1	18	2	35	24	51	14	3	2	2
시기별	3(1%)		55(35%)				72(46%)				

※전거: 河謙鎭 編, 『慶尙道案』Ⅰ-Ⅱ, 아라, 2013.

숙종후반-정조연간 55명(35%), 19세기 순조-고종연간 72명(46%)에 달하여 줄어들기는 커녕 더욱 늘어만 갔다.

그동안 벌열연구에서 주요가문을 중심으로 연구했을 때는 서울-경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보였으나 실제 영남 일부만 조사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과거급제자의 관직진출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통상 문과급제자는 참상관에서 당상관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기 마련인데,[102] 영남 가문에서는 참상관(50%)과 당상관(39%)의 차이는 17명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영남인이 당상관이상 되기 어렵고 대신 혹은 재신[103]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또한 왕대별로 보아도 갑술환국, 무신란, 신유박해 등으로 영남사람이 폐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①『문과방목』·『무과방목』이나 ②『도당록』(옥당)이나 ③표본조사 등 각종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영남인의 官路가 막힌 적은 없었다. 특히, 갑술환국이후 남인출신 정승도 정조대(근기남인 蔡濟恭)나 고종대(영남남인 柳厚祚) 두 차례나 나타난다. 경화사족의 발달로 서울출신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경상도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104] 이는 서울보다 뒤쳐진다고 볼 수 있

102) 원창애, 앞의 글, 2010, 113쪽.

103) 1품관은 大臣·大官으로 불리는데, 의정부·돈녕부·중추부·의금부 등에 속하는 조정의 원로이자 국왕의 자문과 최종 결정에 참여하였다. 2품관이상은 宰臣·宰相으로 불리는데, 대체로 육조판서·팔도관찰사·팔도병사·한성판윤 등 중앙-지방의 민정-군정을 장악하여 국가의 주요실무를 관장하는 직위를 지칭하였다. 2품이상은 임명되면 告身이 敎書로 내렸고 자식이 서얼일지라도 출사가 보장되었으며, 퇴직후에는 奉朝賀가 되었고, 사후에도 諡號를 받는 특전을 누렸다. 김백철,『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이학사, 2016, 396~397쪽.

104) 집계기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는데 조선시대(5백년)·15-17세기(3백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영남이 지방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원명의 연구에서는 영남급제자가 15세기(241명), 16세기(300명), 17세기(383명), 18세기(339명), 19세기(495명)로 18세기에 일시적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지방 1위는 18세기 충청도(452명), 19세기 평안도(639명)로 집계된다. 이는 영남의 장기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감소가 있었고, 지방 1위가 도전받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영남의 소외감은 이같은 수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왕대별로 살펴보면, 15세기 태조·정종·태종·세종대가 연간 0.5-1.6명 급제인데 반해서 18세기 숙종·경종·영조·정조대가 연간 3.2-4명에 달하여 영남진출자

으나 특정 지방에 대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고종연간 영남인의 진출을 살펴보면,[105] 문과급제자 186명으로 단일왕대로 역대 최대치에 달하며, 그중 갑과 1-3, 을과 1-2위, 병과 1위 등 상위권 급제자는 29명에 이른다.[106] 또한 고종대 정승까지 배출하여 집권에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07]

2. 영조-정조연간 등용책

1) 남인 우대책

남인계열은 갑술환국이후 정상적인 출사가 막힌 적은 없었다. 단지 단독집권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경종연간에는 소론(급소)과 남인 일부가 합세하여 임인옥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睦虎龍

가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 김인호는 18세기 충청도의 약진을 노론뿐 아니라 기호남인의 약진이 함께 고려되었고 『속대전』이후 음직자 연한제한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차미희는 惟才是用에 따라 서북등용이 이루어지면서 생긴 규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오히려 영남이 주장해온 남인등용·능력위주 인사정책이 실시되어 나타난 역설적 현상이였다. 19세기 평안도의 지방 1위 석권은 고종대 서북등용 정책인데 이 역시 영남출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1999, 216~217쪽, 255~256쪽; 이원명, 앞의 책, 2004, 102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31~32쪽, 34쪽, 41쪽.

105) 세도정치기를 포함하여도 영남의 연간 문과급제자는 순조(4.5명), 헌종(4.9명), 철종(5.7명), 고종(6.1명)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인호는 영남남인이 각 정국에서 왕권강화에 이바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만인소를 올린 결과로 분석하였다.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110~114쪽.

106) <표 6> '숙종후반(숙종20)-고종연간 영남 문과 상위급제자 현황' 참조.

107) 민간에서는 여전히 노론이 독재하여 영남인의 관로가 막혀 조선이 망했다는 주장을 일삼고 있다. 특히 갑술환국이후 남인이 관로가 막혔으며, 을사조약 체결가담자나 강제병합이후 훈작대상이 모두 노론이고 영남학파가 없었다는 점 등 특정시기 일부사실만 뽑아서 도식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론책임론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의 당쟁사관에서 등장한 논리이다. 弊源坦, 『韓國政爭志』, 三省堂, 1907; 다카하시 도루(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도광순, 「영남학파의 개념과 성격특성」, 『영남학파의 연구』, 병암사, 1998, 29쪽; 조찬용, 앞의 책, 2003, 89쪽.

은 남인 서얼출신인데 옥사를 통해서 3등 공신으로 東城君에 봉작되었고 동지중추부사(종2품)까지 받았다. 反왕세제(영조)노선을 통해서 출사를 도모하였는데 경종과 영조의 단결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때문에 영조즉위를 도운 소론(준소·완소)-남인(청남)은 중앙정계에서 활약하게 되었고, 여기서 배제된 소론(급소)-남인(탁남)은 무신란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영조에 대한 지지와 반대 모두에 각 붕당이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반란에 일부 남인이 가담했다고 해서 중앙정계에서 배척될 수도 없었으며, 의병을 일으켜 진압에 참여하고자 한 영남인이 모두 처벌받을 수도 없었다. 모두 상식 밖의 추측에 불과하다.

무신란이후 중앙의 인사는 노론-소론을 동일비율로 등용하는 雙擧互對가 시행되다가 정국이 안정된 이후 능력에 따라 등용하는 惟才是用이 점차 표방되었고 이후 長望(4인이상 추천)까지 도입되어 남인의 등용폭을 확대해나갔다.[108] 영조가 이같은 정책을 제도화되지 않았다면 정조연간 남인의 고위관료 진출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109]

영조연간 총애를 받던 吳光運은 개성유수(종2품)까지 오르며 재신의 반열에 있었고, 洪景輔 역시 대사간과 경기관찰사(종2품)를 거쳐 좌찬성(종1품)에 추증되어 대신급으로 올라섰다.[110] 특히 영조는 만년에 탕평대신을 顯彰할 때에도 노론·소론뿐 아니라, 남인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남인관료와 각별하였다. 국왕은 "오광운과 홍경보는 지금 조정에서 마음에 들어 임용한 신하들과 달라서 무신년(영조4/1728)에 대의를 지켰으니, 현재까지 더욱 그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賜祭하고 그 자손은 陞敍하도록 하교하였을 정도로 특별히 우대하였다.[111]

정조연간[112] 蔡濟恭이 좌의정 및 영의정(정1품)까지 오르며 집권에

108)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임오화변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43, 부산경남사학회, 2002, 70쪽.
109) 김성윤, 앞의 책, 1997, 351~287쪽, <정조대 주요정치참여자의 가문별 분포>.
110) 오광운·홍경보의 정국참여는 다음 참조.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194~195쪽.
111) 『英祖實錄』 卷84, 英祖 31年 5月 丙申(23日); 김백철, 앞의 책, 2014, 111쪽.

성공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尹東暹은 이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종1품)로, 洪秀輔는 예조판서를 거쳐 판의금부사(종1품) 등으로 각각 대신으로 승차하였다.

李家煥은 광주부윤·개성유수를 거쳐 형조판서(정2품)까지 이르렀고, 尹坊은 예조판서(정2품), 李獻慶은 한성판윤(정2품), 韓致應은 병조판서(정2품), 蔡弘履는 형조판서(정2품), 洪檢은 대사헌(종2품), 吳大益은 병조참판·호조참판(종2품), 柳炯은 병조참판(종2품), 任希敎는 이조참의·대사헌(종2품), 任希曾은 대사헌 및 호조참판(종2품), 尹弼秉은 대사간·형조참판(종2품), 蔡弘遠은 공조참판(종2품), 李儒慶은 우포도대장·삼군수군통제사·평안병사(종2품), 洪和輔는 함경북도병마절도사·황해도병마절도사(종2품), 李昌運은 咸平君에 봉작되고 총융사·어영대장(종2품), 崔獻重은 寧春君에 봉작되고 참판(종2품) 등 재신에 이르렀다. 李益運 역시 이조판서(정2품)에 증직되었다.

丁若鏞은 형조참의(정3품), 尹永僖는 참의(정3품), 李儒慶은 승지 및 병조참지(정3품), 申挺權은 승지(정3품), 申景濬은 제주목사(정3품), 李宗燮은 능주목사(정3품), 申禹相은 사간·집의(종3품) 등 3품관(당상관포함)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睦萬中은 정조대 가선대부(종2품)에 이미 올랐고 채제공이 정계에서 물러난 뒤에도 남인계를 보호하였으며 순조대 신유박해 당시에는 천주교탄압 선봉에 서면서 대사간과 지중추부사(정2품)까지 올랐다.[113] 이는 모든 남인이 서학도가 아니었으므로 19세기에도 여전히 출사가 막

112) 정조연간 인물은 다음 참조. 단, 북인은 그중 소북계가 근기남인으로, 대북계가 영남남인으로 각기 편입되었으므로 모두 남인에 포함시켰다. 김성윤, 앞의 책, 1997, 356~287쪽 ; 정호훈, 『朝鮮後期政治思想硏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 중심으로』, 혜안, 2004, 101~174쪽.

113) 목만중은 자신의 가문을 탁남에서 청남으로 재규정하고 순조연간 천주교박해시에도 생존할 정도로 중앙정계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백승호, 「정조연간 남인문단과 지성인의 결속」, 『한국문화』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77~80쪽; 최우혁, 「정조~순조대 근기남인의 분화와 정치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90, 조선시대사학회, 2019, 273쪽, 279쪽, 281쪽, 298쪽.

히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 영남 등용책

"鄒魯之鄕"은 조선전기부터 양남(호남·영남)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114] 이는 "人材之府庫"와 더불어 즐겨쓰였는데,[115] 조선후기에는 오직 영남만을 대상으로 추로지향의 표현이 살아남았다.[116] 이것은 조선시대 지방 문과급제자 1위를 영남이 오로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갑술환국이후 중앙정계에서 영남인에 대한 인재등용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경종대는 소론 趙泰億이 발의했고 영조대는 노론 閔鎭遠, 俞拓基, 소론 金尙星, 趙趾彬, 李台佐 등이 건의하였다.[117] 특히 소론측은 무신란이후에도 영남의 적극적인 등용을 주장했다.[118] 이 때문에 민간의 선입견과 달리 갑술환국이후에도 영남 거주자의 문과급제는 중단되지 않았다.[119] 심지어 평안도와 경상도는 지역할당제까지 실시하였다.[120] 이 때문에 두 지방은 급제자수가 고비율로 유지할 수 있

114) 『中宗實錄』卷31, 中宗 12年 12月 己巳(28日).

115) 『英祖實錄』卷10, 英祖 2年 7月 辛亥(21日); 『正祖實錄』卷13, 正祖 6年 6月 乙亥(10日).

116) 『孝宗實錄』卷5, 孝宗 元年 11月 辛酉(11日); 『英祖實錄』卷42, 英祖 12年 9月 壬寅(11日); 『英祖實錄』卷87, 英祖 32年 3月 丙戌(18日); 『英祖實錄』卷90, 英祖 33年 10月 戊寅(19日); 『英祖實錄』卷112, 英祖 45年 4月 丁巳(5日); 『正祖實錄』卷13, 正祖 6年 6月 乙亥(10日); 『正祖實錄』卷19, 正祖 9年 3月 壬申(23日); 『正祖實錄』卷27, 正祖 13年 6月 丙子(22日); 『正祖實錄』卷33, 正祖 15年 12月 己未(19日); 『正祖實錄』卷47, 正祖 21年 7月 辛巳(14日); 『純祖實錄』卷18, 純祖 15年 6月 壬申(18日); 『純祖實錄』卷29, 純祖 27年 5月 丙申(21日); 『高宗實錄』卷6, 高宗 6年 2月 乙巳(3日).

117) 『景宗實錄』卷3, 景宗 元年 5月 辛未(11日); 『景宗實錄』卷14, 景宗 4年 正月 丙戌(11日); 『英祖實錄』卷6, 英祖 元年 5月 丁巳(20日); 『英祖實錄』卷9, 英祖 2年 5月 甲辰(13日); 『英祖實錄』卷13, 英祖 3年 9月 壬戌(9日), 丁卯(14日); 『英祖實錄』卷15, 英祖 4年 正月 辛巳(30日).

118) 『英祖實錄』卷15, 英祖 4年 正月 辛巳(30日);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의 책, 582~585쪽.

119) 갑술환국 이후도 영남 거주 문과급제자는 762명(57%)에 달한다.

120) 영조즉위 초부터 문관·무관·음관 모두 注擬할 때(인사추천시) 西北의 전례에 따라서

었다. 다른 지역들도 같은 수준의 지역할당제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영조는 무과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였다.[121] 정조 역시 선왕의 정책을 계승하되 전국 단위로 별무사를 확대하면서 영남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였다.[122]

갑술환국이후 숙종연간에도 영남인이 계속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었으나 경종연간에 이르면 영남인을 정책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영조연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소론·노론 모두 이러한 입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주요하다. 더욱이 현대 학자들이 영남남인 탄압의 원흉으로 생각하는 영조대 민진원조차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정조대 채제공은 노론과 연대하여 연합정권을 세우기도 했다.[123] 이는 경상도지역에서 노론이 남인의 적대세력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국왕 영조는 신료들의 간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영남인을 할당제로 등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무신란이 일어나면서 영남인의 등용에 신중을 기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이는 노론만의 목소리는 아니었으며 괘서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조정에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지 않기는 어려웠다. 다만, 괘서의 비중은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124] 그

'嶺南'이라고 注를 달고 특별히 기용하도록 하였고 다른 지방에 검토하라고 했으나(『英祖實錄』卷6, 英祖 元年 5月 丁巳/20日), 실제 두 지역이 중심이었다(『英祖實錄』卷37, 英祖 10年 正月 己丑/12日; 『英祖實錄』卷39, 英祖 10年 10月 癸丑/11日).

121) 서울은 兩所에 각기 2백 20인을, 嶺南·湖南은 각 80인을, 湖西·海西·關西는 각 50인을, 關東은 20인을, 咸鏡南道·함경북도는 각 15인을 取하였다. 『英祖實錄』卷13, 英祖 3年 9月 丁卯(14日).

122) 『正祖實錄』卷13, 正祖 6年 6月 乙亥(10日); 『大典通編』「兵典」, 試取, 慶尙道別武士;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경인문화사, 2016, 291~293쪽.

123) 정조 12년 남인 단독정권이 성립하였고, 정조 19년에는 남인-노론 보합정권이 출현했다. 단, 이 기준은 議政大臣기준이다. 김성윤, 앞의 책, 1997, 291~319쪽;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9, 147, 155~156쪽; 김백철, 「정조 6년(1782) 윤음의 반포와 그 성격: 송덕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7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9, 99쪽 註180.

124) <표 8> 숙종후반-영조대 괘서사건 사례

동안 영남비판 기사만을 찾아내어 영남차별론의 근거처럼 이용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지역의 입장을 강조한 나머지 과도한 해석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사료상 영남을 비판하는 언사는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로 나온다.

각종 변란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지역할당제를 통해 영남인을 꾸준히 등용하였다.[125] 영조연간 權相一은 병조참판·대사간을 거쳐 대사헌(종2품)·지중추부사(정2품)까지 이르렀다.[126] 鄭玉은 황해도관찰사(종2품), 李衡祥은 경주부윤(종2품)까지 도달했고,[127] 柳正源은 대사간·형조참의(정3품)를 지냈다.[128] 특히 무신란 당시 순절한 士

구분	일자	괘서 출현지역	비고
1	숙종 37년 4월 30일	한양 延恩門	서울
2	숙종 40년 5월 2일	한양 敦義門	서울
3	숙종 41년 11월 1일	한양 闕門	서울
4	영조 3년 12월 12일	전주	호남
5	영조 3년 12월 14일	남원 場市	호남
6	영조 4년 1월 17일	한양 西小門	서울
7	영조 4년 2월 17일	한양 鐘街	서울
8	영조 4년 2월 19일	전주(모의)	호남
9	영조 9년 3월 1일	남원 場市	호남
10	영조 10년 정월 2일	대구 鎭營門	영남
11	영조 14년 11월 24일	한양 宮城	서울
12	영조 16년 2월 5일	남원	호남
13	영조 17년 10월 20일	한양 大闕 紅馬木	서울
14	영조 24년 5월 21일	청주, 문의	호서
15	영조 31년 2월 4일	나주	호남
16	영조 38년 2월 28일	한양 闕文(모의)	서울
17	영조 39년 9월 28일	나주 望華樓	호남
18	영조 50년 10월 28일	해남	호남

125) 영남 문과 급제자는 영조초반(영조1-3)에만 24명이며, 무신란이후(영조4-영조52)에도 91명에 달한다. <표 5> '조선후기 경상도 문과급제자 왕대별 현황' 참조.

126) 노혜경, 「18세기 한 영남남인의 관직생활: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315쪽.

127) 이수건은 두 인물을 노론의 체제내 출사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국왕 주도의 탕평정국을 노론정권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실상과 다르며, 2품재신은 가벼운 지위가 아니었다. 이수건, 앞의 책, 1995, 403쪽.

128) 우인수, 「영조대 영남남인 류정원의 관계진출과 관직생활」, 『대구사학』140, 대구

人(座首) 이술원은 대사헌(종2품)에까지 추증되었다.

게다가 영조 37년(1761) 영남지역 鄕戰에서 노론계가 외지인이나 신생양반을 이용해 新鄕을 통해 분쟁을 일으킬 때에도 국왕은 향촌사족(舊鄕) 보호조치를 취해나갔다.[129] 정조 13년(1786) 영남에서 향전을 배후에서 조정한 관찰사(洪檍)를 탄핵하자, 국왕은 도신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까지 단행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130] 이 역시 관권을 매개로 사족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선왕과 마찬가지로 철퇴를 내린 조치였다.

정조연간 남인의 중앙정계 진출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영남인의 등용도 함께 추진되었다. 영남에서는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국왕의 정치명분을 높여서 출사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①정조즉위년(1776) 李道顯-李應元 父子가 사도세자의 신원을 상소했다가 사형을 당했다.[131] 이는 영남인의 바람과 달리, 정조의 최대 지지세력은 노론청류였으므로 즉위직후 선왕의 國是를 변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②정조 12년(1788) 근기남인(蔡濟恭)의 협조하에서 『무신창의록』을 올렸으나 일부 인사(조덕린·황익재)만 신원되었고 간행이나 포상에는 실패하였다.[132] 하지만 이를 전후하여 남인 채제공의 단독집권이 이루어졌다. ③정조 16년(1792) 윤4월에 「嶺南萬人疏」(10,057명)를 올려 사도세자의 신원을 재차 상소하여 추숭사업의 분위기를 돋구었다.[133] 이는 같은해 3월에 陶山書院에서 특별히 영남사족을 대상으로 試士를 보도록 명하고 국왕이 직접 채점하는 은택을 내리고 이를 『교남빈흥록』으로 편

사학회, 2020, 28~29쪽.

129) 김봉곤, 「영남남인 하대관의 가문계승의식과 향촌사회활동」, 『남명학연구』58,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182쪽.

130) 『正祖實錄』卷27, 正祖 13年 6月 丙子(22日).

131) 『正祖實錄』卷1, 正祖 卽位年 4月 壬寅(1日); 『正祖實錄』卷2, 正祖 卽位年 8月 乙巳(6日); 김백철, 앞의 논문, 2016, 174~175쪽.

132)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11月 丙寅(8日)

133) 『正祖實錄』卷34, 正祖 16年 4月 壬寅(4日); 『正祖實錄』附錄, 行狀, 壬子(정조16); 이태진, 앞의 논문, 1992, 263쪽; 이수건, 앞의 책, 1995, 542~548쪽; 김성윤, 앞의 책, 1997쪽, 304쪽.

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된 것이다.[134] 물론 『빈흥록』편찬은 영남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팔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경상도 역시 연계한 것이었다. ④정조 19년(1795) 上言을 통해 김성탁 신원운동을 벌였는데 마침내 국왕의 의지로 복관되었다.[135] 정조는 즉위후 화성을 축조해왔는데 연초에 화성행차를 단행하여 사도세자 추모사업이 추진된 시점이였다.[136] 당시 사도세자는 완벽한 신원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때의 기억은 고종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었다.[137] ⑤정조 22년(1798) 전국단위에 『인물고』 및 『국조인물고』가 편찬되자, 영남을 대상으로 별도로 『영남인물고』까지 추가로 편찬되어 지역인물을 현창하도록 했다.

영남의 기대는 초창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같은 남인 및 영남남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는 영남인에게 정조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향수를 뇌리에 각인시켜주었다. 지나칠 정도로 정조와 영남남인을 동일시하면서 정조독살설같은 음모론까지 나타났다.[138] 더욱이 정조사후 신유박해로 채제공계열이 상당히 타격을 입자, 마치 남인 전체가 폐고된 것으로 단정짓는 기억왜곡까지 더해졌다. 이는

---

134) 『正祖實錄』卷34, 正祖 16年 閏4월 乙未(27日); 이수건, 앞의 책, 1995, 538~548쪽; 김성윤, 앞의 책, 1997, 302~304쪽.

135) 『正祖實錄』卷43, 正祖 19年 10月 己丑(12日); 『正祖實錄』卷43, 正祖 19年 10月 庚寅(13日).

136)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241~252쪽;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108~259쪽.

137) 고종대 영남남인의 대규모 등과 및 출사가 이루어지고(고수연, 앞의 논문, 2013, 319~324쪽; 정필준, 「1860-1870년대 근기남인의 내부갈등과 동향」,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2015). 고종 26년 영조의 묘호가 먼저 추존되자(김백철, 앞의 책, 2014, 309~343쪽), 고종 36년(1899) 대한제국 선포후 태조·정조·순조·문조 추존과 더불어 사도세자 신원사업(고종36/1899년 1차 莊宗, 2차 莊祖懿皇帝)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다.(『承政院日記』, 己亥(고종36) 7月 27日(壬申)[양력 9월 1일], 11月 12日(丙辰)[양력 12월 14일]).

138) 김호, 「記憶, 敍事 그리고 歷史大衆化: '正祖毒殺說'과 茶山 丁若鏞」, 第16回韓日歷史家會議, 東京, 2016.11.04.~.06. 122-142쪽; 김호, 『조선왕실의 의료문화』, 민속원, 2017, 296~324쪽.

일제강점기 조선학운동이 『여유당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약용의 학맥에 시대상황을 과몰입해서 생긴 오류이다.

하지만 국왕은 모든 붕당·지역에 대해 애정을 보이면서 충성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노론-소론이나 시파-벽파 역시 정조의 친위세력이였다.[139]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남인내 서학도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근기남인이나 영남남인의 출사는 19세기에도 지속되었다.

Ⅳ. 가문중심주의 문제점

1. 집단구조화의 맹점

오늘날 '서울공화국'으로 불리는 고도의 중앙집중은 19세기 세도정치기 이른바 '京華士族'의 閥閱家門 등장으로 비롯된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 부유하고 과거급제자가 많았던 경상도와 평안도가 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정한 정파나 지역출신이 단독으로 집권하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곧 중앙의 집권여부와 지방의 차별은 별개의 사안이다. 평안도나 경상도는 모두 개인의 과거급제나 출사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중앙정계에서 단일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보다 열악한 출사환경을 지닌 다른 도는 아무런 구호도 내세우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학파=정파=가문=지역'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139) 박광용,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 『한국사론』1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210쪽, 213쪽, 245~252쪽; 최성환, 앞의 논문, 2009, 95~106쪽; 김백철, 「영조만년의 초월적 권위와 '大蕩平'」, 『역사학보』214, 역사학회, 2012, 31~32쪽; 김백철, 「정조초반 『명의록』과 왕권의 위상: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 『대동문화연구』9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177~181쪽; 김백철, 앞의 논문, 2019, 97~102쪽.

첫째, 학파-정파의 경우, 학파를 규합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형태가 대단히 늦게 출현하고 있다. ①서인을 대표하는 율곡학파의 사례를 살펴보면 17세기말까지도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였다.[140] 붕당정치기는 물론이거니와 탕평정치기에도 이같은 의식이 얼마나 결속이 강했는지 알기 어렵다. ②붕당이 집권하면 나타나는 分岐현상도 학파의식이 공고하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서인에서 노론·소론으로, 동인에서 남인·북인으로, 남인에서 청남·탁남으로 각기 분열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치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도층과 비주도층의 견제구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그럴듯한 정치명분이 덧붙여진 것이다. ③당색간 합종연횡도 잦았다. 17세기 인조반정이후 소북은 남인으로 편입되었다(近畿南人/京南/畿湖南人). 18세기 남인과 소론이 연대하거나(신임옥사 睦虎龍-金一鏡, 무신란 李麟佐-李思晟), 소론이 노론으로 전향하거나(金榦),[141] 남인이 노론으로 변신하였다(安鍊石).[142]

둘째, 정파-가문의 경우에도 동질성을 항상 유지하지는 못했다. 후대사람은 "叛父背祖"나[143] 변절로 표현하고 있으나[144] 사실 같은 가문 내에서 당색의 변동은 매우 잦았다. 이미 14세기부터 권문세족 가문에서 신진사류가 등장하였고(趙浚), 15세기 훈구가문에서 사림이 등장하였으며(趙光祖), 18세기 사촌간에도 노론과 소론이 갈리어 당색이 달리하였다(趙泰采-趙泰耉). 같은 가문(本貫姓氏 기준) 내에서 소론과 노론은 물론이거니와 남인이나 북인까지 병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145] 다른 당

140) 유새롬, 「17세기 서인의 학통의식과 栗谷年譜의 편찬」, 『한국사론』52, 서울대 국사학과, 2006, 9~13쪽, 65~67쪽; 김백철, 「山林의 徵召와 出仕: 朴世采의 辭職疏를 중심으로」, 『규장각』3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128~129쪽.

141) 정경희, 「17세기 후반 '전향노론' 학자의 사상: 박세채·김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113~114쪽.

142) 이욱, 앞의 논문, 2011, 155쪽.

143) 이수건, 앞의 책, 1995, 427쪽;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171, 한국사연구회, 2015a, 220쪽.

144) 마르티나 도이힐러(김우영 외역), 『조상의 눈 아래서』, 너머북스, 2018, 585쪽.

145) 김성윤, 앞의 책, 1997, 356~387쪽;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색간 혼인이 이루어졌고,[146] 기존 당색을 넘나들며 자신의 개혁의지를 실현하거나 혹은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淸流와 反청류로 결집했다.[147]

셋째, 지역-정파의 경우에도 일대일대응을 찾기는 어렵다. 영남에 노론서원이 들어섰고,[148] 호남에서도 노론서원이 들어섬으로써,[149] 지역간 당색도 불분명하였다. 특히 남인은 경기-호서,[150] 호남,[151] 영남[152] 등 다양하게 존재하여 본래 지역개념이 아니었다. 노론이나[153] 소론[154]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8, 한국서원학회, 2019b, 111~114쪽.

146) 조강희는 영남가문의 혼인관계 연구에서도 통상적인 영남내 학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유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仰婚과 落婚을 통해 신분을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혼인형태도 소개하고 있다. 또 채광수는 소론가문의 다른 당색 가문과 통혼양상도 분석하였다.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2006, 63~65쪽, 68쪽, 70쪽, 80~81쪽, 83쪽, 86~87쪽, 98~99, 146~147쪽; 채광수, 「영남 소론계 가문의 존재와 계승 양상: 봉화 진주강씨 姜恪가문을 중심으로」, 『대구사학』139, 대구사학회, 2020, 7~11쪽.

147) 박광용, 앞의 논문, 1984, 210쪽, 213쪽, 245~252쪽; 최성환, 앞의 논문, 2009, 95~106쪽; 김백철, 앞의 논문, 2012, 31~32쪽; 김백철, 앞의 논문, 2016, 177~181쪽; 김백철, 앞의 논문, 2019, 97~102쪽.

148) 정만조, 「영조 14년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1, 동덕여대 한국학연구소, 1982, 49~83쪽;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42쪽;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2, 조선시대사학회, 2015b, 229~268쪽;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한국서원학보』4, 한국서원학회, 2017, 110~114쪽;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의 책, 2018, 588~592쪽; 채광수, 앞의 논문, 2019b, 111~114쪽.

149) 고수연, 앞의 논문, 2011, 35쪽; 이선아, 「18세기 호남의 노론계 서원과 평해황씨 : 흥덕 동산서원과 정읍 고암서원를 중심으로」, 『전북사학』54, 전북사학회, 2018, 69~102쪽.

150) 정호훈, 앞의 책, 혜안, 2004, 101~174쪽; 김성윤, 「기호남인의 홍범이해」, 『조선시대사학보』16, 조선시대사학회, 2001, 80쪽.

151) 고영진, 「호남남인 윤선도의 관계망」, 『민족문화연구』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140~168쪽.

152) 이수건, 앞의 책, 1995; 김성우, 앞의 책, 2012; 우인수, 앞의 책, 2015.

153)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23, 역사실학회, 2002, 94~107쪽; 정진영, 앞의 논문, 2015b, 229~268쪽.

154) 채광수, 앞의 논문, 2020, 7~11쪽.

역시 영남을 비롯해 여러 지방에 폭넓게 거주하였다.

넷째, 영남내 차별론의 대두이다. 최근들어 서울-영남의 대립구도뿐 아니라, 영남내 좌도 대 우도의 대립을 구조화하려는 시도도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북인-남인 또는 남명학파-퇴계학파의 구도를 설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신란을 좌도가 우도를 진압한 사건이다"고 예단하기도 한다.[155]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있다. 인조반정이후 당색으로서 북인의 정체성은 소멸되었고 남인에 흡수되었으므로 남명학파를 북인으로 재규정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지극히 제한된 지역의 입장을 학문에 투영하여 독립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에 불과하다.

더욱이 ①무신란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 집결한 의병은 실전을 치루지도 못했고, 관군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초기에 모반세력은 이미 분멸되었다. 그런데도 좌도와 우도의 대립을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실제로 동인의 分岐이후 남인을 표방한 이덕형가문은 무신란 당시 반란과 진압 양측에 모두 가담했다.[156] ③상주(韓世弘·金弘秀), 문경(曺世樞·李白全), 하동(李命根·朴必移) 등에서는 무신란 가담자가 출현하였으나[157] 동시에 의병도 함께 일어났다.[158] ④무신란은 전국규모 반란(경기·평안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이었는데도 경상도 70여읍 중에서 반란에 가담한 고을은 안의·거창·합천·함양·삼가 등 5읍에 불과하였다.[159] 그런데도 경상도 전체를 차별한다거나 혹은 좌도-우도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역사왜곡인지 알 수 있다. ⑤조정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지역조차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차별가능성에 주

155) 고수연, 앞의 논문, 2003, 345~346쪽; 조찬용, 앞의 책, 2003, 77~78쪽.

156) 무신란 당시 이덕형가문에서 이석인은 진압군에 참여한 공으로 당하관을 가자받았고, 이지인은 반란군에 가담하여 처벌되었다. 이근호「조선후기 남인계 가문의 정치사회적 동향」,『역사와담론』69, 호서사학회, 2014, 87~88쪽.

157) 조찬용, 앞의 책, 2003, 47쪽 <무신사태 주도층의 확대상황> 참조.

158)『戊申倡義錄』卷1, 尙州義兵軍門座目;『戊申倡義錄』卷4, 別錄, 河東;『戊申倡義錄』卷4, 追錄, 聞慶義兵軍門座目<한古朝78-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9)『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辛巳(1日), 壬午(2日), 甲午(14日); 李宜哲撰·黃景源書,「平嶺南碑」(정조4); 오갑균,「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역사교육』21, 역사교육연구회, 1977, 84~87쪽; 조찬용, 앞의 책, 2003, 53~61쪽.

의를 기울였으며 공로자를 적극 포상하였다. 영조는 무신란직후 “안음·거창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당부하였다.[160] 거창좌수 이술원은 반군에 맞서다가 순절했으며 그 아들은 종군하여 정희량의 반군을 물리쳤다.[161] 조정에서는 부자의 節義를 기려서 이술원을 대사헌(종2품)에 추증하고 사당(褒忠祠)을 세워서 액호까지 하사하였으며 원종공신에 녹훈하여 그 아들과 손자까지 녹용하였다.[162] 이는 반란이 일어난 지역을 차별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⑥그동안 영남 전체 혹은 우도의 출사길이 막혔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심지어 반란에 참여한 5읍의 문무과 급제도 전혀 막히지 않았다.[163]

따라서 무리하게 좌도와 우도를 나누고 가문에 따라 정파를 분류하여 ‘상상의 담론’을 펼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남명학파와 퇴계학파가 단일한 대오를 펼칠 수는 없었으나 점차 영남 동류의식을 공유해나갔다.[164]

---

160) 『英祖實錄』卷22, 英祖 5年 6月 戊戌(25日).

161) 『英祖實錄』卷16, 英祖 4年 3月 丁丑(27日); 『英祖實錄』卷17, 英祖 4年 4月 壬午(2日), 甲午(14日); 『英祖實錄』卷21, 英祖 5年 3月 乙卯(11日); 『英祖實錄』卷22, 英祖 5年 6月 戊戌(25日); “十三日突入居昌居昌縣縣監避匿座首被殺.” 吳彦耉, 『南征日錄』, 3月 28日<K2-185>(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李遇泰, 『禾谷戊申日記』<古3653-7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河世滉, 『戊申日記』<古2511-88-8>(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升原戊申日記」, 『두산백과』(전자판).

162) 『英祖實錄』卷46, 英祖 13年 12月 乙巳(22日); 『英祖實錄』卷47, 英祖 14年 3月 乙亥(23日); 『英祖實錄』卷66, 英祖 23年 11月 甲寅(28日); 『英祖實錄』卷79, 英祖 29年 正月 癸未(27日); 『英祖實錄』卷82, 英祖 30年 8月 乙卯(8日); 『英祖實錄』卷123, 英祖 50年 12月 乙酉(6日); 채광수, 앞의 논문, 2019a, 223~231쪽.

163) <표 9> 무신란 가담고을의 문무과급제자

고을	영조 4-52	정조	순조	철종	고종
거창	무1			문1	
삼가	무1	무1	무1	문1	문1
안의/안음		문1	문3	문1	문3
함양	문1	문1/무6	문3	문3	문9
합천	무3	무1		문1	문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2020.10.20. 검색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당파성론 출현배경

이러한 변화상은 모두 학파나 가문 그리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정치활동(정파)을 선택한 결과였다. 중앙정계의 출사와 재편이 자유로운 시절에 '개인의 선택'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현대정치에서 대부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정치이념을 선택하듯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165] 심지어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하는 한미한 가문출신도 문과에 다수 급제하였다.[166] 그런데도 전통시대에는 개인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근대지상주의 선입견 속에서 가문에 속박된 人間群像을 상상해온 것이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를 이어 견고한 정치성향을 보존하는 가문도 없지 않다.[167] 특히 세도정치기 京華士族을 중심으로 조정이 운영되자,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향촌양반은 族譜·文集·黨色譜·黨論書·學案 등을 제작하여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가문의 정통성을 내세웠다. 점차 지방에서 자신들의 '학파·정파·가문·지역'을 동일시해나갔다. 3대이상 관료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과거

164) 18세기 퇴계학파 김성탁은 남명-퇴계를 南斗-北斗로 추숭했고, 19세기초 남명학파도 퇴계학파와 연대하여 회재-퇴계-남명을 모시는 三山書院 추숭사업을 벌였다. 최석기, 『조선후기 경상우도의 학술동향』, 경인문화사, 2019, 57쪽, 132~133쪽.

165)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제국대학에서 수학한 기득권층 자제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회주의자가 되어 월북하였다(김석형·박시형·전석담).

166) 한영우는 '한미한 가문' 기준으로 ①『방목』에 성관이 없는 경우, ②성관의 족보를 만들지 못한 경우, ③족보에 급제가 가계가 없는 경우, ④족보에 父·祖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방목』에 서얼·貢生(향리)으로 기재된 경우, ⑥족보에 외조·4대조 벼슬기록이 없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그중 18세기 영남 출사자를 확인해보면, 영조대 총 794명 중 78명(9.8%), 정조대 총 412명 중 71명(17.2%)이다. 이는 영남 문과급제자 중 영조대(115명 기준)의 67%, 정조대(97명 기준)의 73%에 달한다. 한영우,『과거 출세의 사다리1: 태조-경종』, 지식산업사, 2013, 99~101쪽; 한영우,『과거 출세의 사다리2: 광해군-영조』, 지식산업사, 2013, 427~644쪽; 한영우,『과거 출세의 사다리3: 정조-철종』, 지식산업사, 2013, 45~160쪽; <표 5> '조선후기 경상도 문과급제자 왕대별 현황' 참조.

167) 조강희, 같은 책, 2006, 153~181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56~70쪽.

에 합격하지 못하면 양반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풍토에서 족보 등을 통해서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현존하는 대다수의 족보가 19세기에 편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향촌에서 거액을 투자하여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168]

더욱이 18세기 탕평정국에서 해체된 당색을 강조하는 주장 역시 19세기에 두드러진다. 중앙정계에 가장 많은 인사들이 출사했던 붕당-탕평정치기의 당색이 중요해졌다. 곧 이미 붕당정치가 소멸한지 수백년이 지난 시점에 가문이 가장 화려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그 후예임을 주장하는 행태이다. 19세기부터 당론서가 급격히 편찬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색의 이동이 가능했던 역사적 사실보다 고정되었을 것이다는 강렬한 믿음이 더 중시되었다. 후대에 성씨와 본관을 기준으로 수많은 종류의 『南譜』(또는 『午譜』)가 편찬되었고,[169] 심지어 20세기 일제강점기에는 16세기말~17세기초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된 동인의 계보를 편찬하였을 정도였다. 마치 족보에서 동성집단 전체로 확장해나가는 현상과도 유사하다.[170] 이는 향촌사회에서 불안정해진 양반의 지위를 보존할 수 있는 명분찾기에 지나지 않았다.

동시에 지나치게 영남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경계가 필요하다.[171] 『慶尙道案』(1944)의 294개 본관성씨 중 경상도(125), 전라도

168) 許傳(1797-1886)의 『性齋集』(총17책)은 문인(朴致馥·李命九)이 1903년 편찬하였는데, 비용만 비교해보면 약 8,613냥(이하 절삭)이며 소값으로 약 170마리 금액에 해당한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은 2019년 800만원(정상)~2020년 200만원(폭락)이므로, 환산하면 13억 6천만원(최대)~3억 4천만원(최소)이 소요되므로 1책당 8천만원(최대)-2천만원(최소)의 비용이 필요했다. 손계영, 「『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 『고문서연구』46, 한국고문서학회, 2015, 172~173쪽 ; 진창일, 「물난리에 죽은 소 500마리…"200만원도 못 받고 죽인다"」, 『중앙일보』, 2020.09.10.

169) 김영진, 『조선후기 당파보 연구(2): 『남보』」, 『대동문화연구』9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73~90쪽.

170) 동류·동족의식이 확대되면서 同姓綜合譜가 출현하고 있으며 19세기이후에는 大同譜나 萬姓譜까지 등장하였다. 권기석,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2011, 58~59, 336~338쪽.

171) 박홍갑은 본관과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6), 충청도(38), 경기(30), 황해도(20), 중국계(16), 강원도(15), 평안도(3), 한양(1) 등으로 확인된다.[172] 경상도 비중은 42%로 절반을 넘지 못한다. 고려이후 성립한 본관이 천여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지 재편과정을 통해 오늘날 영남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영남의 정체성 자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20세기 사람들은 가문과 당색을 내세우면서 2백년전에 해체된 붕당정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당시에도 없던 인습을 '전통'적인 양반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일제는 이러한 폐습을 악용하고 붕당정치를 '당파싸움(黨爭)'으로 곡해하여 조선망국의 원인으로 내놓았다.[173] 그러므로 당파성론은 19세기말~20세기초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불우한 시절의 殘像을 조선시대 전체에 투영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 왜곡된 인식이다.

일제의 주장대로 붕당으로 망하려고 해도 중앙정계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망할 수 있겠는가? 중앙의 정치체제인 '붕당정치'와 사람들의 동류의식을 반영하는 '당색'은 층위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는 실제로 조선은 외세침략으로 붕괴되었는데도 일제는 그 책임소재를 가해자(외부요인)가 아니라 피해자(내부요인)에게로 돌리려했기에 향촌사회의 당색인식을 활용하여 당쟁사관·당파성론을 보급한 것이다.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화려한 가문의 이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현재적 관점에서 전통시대를 곡해하여 바라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홍갑, 『우리 성씨와 족보이야기』, 산처럼, 2002, 351~366쪽.

172) 다음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처리하였음. 河謙鎭 編, 『慶尙道案』Ⅰ-Ⅱ, 아라, 2013.

173)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6, 13~26쪽; 김백철, 「'탕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상, 태학사, 2011, 44~62쪽.

Ⅴ. 맺음말

경상도는 명현名賢을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다. 전통시대 영남에 대해서는 어떠한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추로지향鄒魯之鄕과 웅주雄州로서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반역향' 담론을 거론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그릇된 인식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 정치사건의 트라우마이다. 이것이 충격으로 남아서 상대적인 기억의 왜곡현상이 일어났다. 마치 숙종대 이현일의 처벌, 영조대 김성탁의 처벌, 정조의 홍서 등으로 차별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남 출사자가 감소하거나 중단되지는 않았다. 심지어 세도정치기뿐 아니라 고종시대 역시 오히려 영남인의 출사가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차별론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선입견과 전혀 다른 현실이다.

둘째, 과거 급제자 숫자의 일시적 변동이다. 하나는 18세기 영남 급제자가 단기간에 감소하였고, 다른 하나는 18-19세기 충청도와 평안도 숫자가 일시적으로 경상도를 앞서는 시점이 도래했다.[174] 이는 모집단의 변화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남인 등용책과 더불어 기호지방 출사가 늘어났기 때문이었고, 서북인 등용확대 역시 영남인 우대조치와 연동되어 등장하였다. 게다가 음관의 연한을 제한하는 공평한 인사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이 맞물려 추진되자,[175] 역설적으로 영남인의 독보적인 급제자수는 단기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영남의 조선시대 지방 과거 급제자 평균실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셋째, 현재적인 관점에서 지역차별을 논하면서 과거 역사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지방의 정치권에서 선거철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 경상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176] 또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약 2천 600만

174) 이원명, 앞의 책, 2004, 102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28쪽, 33쪽
175) 차미희, 앞의 책, 1999, 216~217쪽, 255~256쪽; 김인호 앞의 논문, 2019, 31~32쪽, 34쪽, 41쪽.

명[177]이 살고 있고, 영남에 약 1천 250만 명[178]이 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5천 178만 명) 중에 약 50%가 수도권에, 약 25%가 영남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사실상 75%가 수도권-경상도에 집중된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차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럼에도 일반대중이 차별 혹은 소외로 기억하는 이유는 비교척도가 가장 높은 16세기 영남의 관직진출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명재상인 柳成龍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5백년 중에서도 최전성기 영남의 위상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곧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한 곳일수록 오히려 조금만 약화되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더욱이 영남은 전국에서 과거급제자가 압도적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비교대상은 다른 지방이 아니라 서울일 뿐이다. 물론 19세기에 중앙이 비대해져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한 지역인을 낙인찍어 차별했다는 뜻은 아니다. 양자는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심지어 요직에서 배제되던 세도정치기 중에도 경상도와 평안도 급제자 자체는 증가했다.

엄밀히 말해서 경상도가 지역차별을 받은 적은 없었다. 단지 서울을 꿈꾸기 때문에 욕망에 비례하여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광복이후 북한은 평안도세력이 집권하고 있고,[179] 남한은 경상도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받던 지역이 갑자기 권력을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이전부터 배출해온 인재의 모집단과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시대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두 비슷

176) 역대 대통령 및 고향은 이승만(서울), 윤보선(충남), 박정희(경북), 최규하(강원), 전두환(경남), 노태우(경북), 김영삼(경남), 김대중(전남), 노무현(경남), 이명박(경북), 박근혜(경북), 문재인(경남) 등인데, 12명 중 4명을 제외하면 8명(66%)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다. 윤보선과 최규하는 짧은 시기 자리에 있었으므로 재임 기간까지 고려하면 비율은 훨씬 더 올라간다.

177) 2019년 정부기준 서울 970만, 경기 1330, 인천 300만 등이다.

178) 2019년 정부기준 대구 243만, 경북 226만, 부산 340만, 경남 336만, 울산 114만 등이다.

179) 물론 피난민 중에는 현대 북한의 평안도민과 함경도민의 교체가 상당히 이루어져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

해 보이는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 모습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강경훈, 「중암 姜彝天 문학 연구: 18세기 근기남인-소북문단의 전개와 관련하여」, 동국대 국어국문과 박사논문, 2001
강주진 역, 『영남인물고』, 탐구당, 서울대출판부, 1978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8
고수연, 「1728년 호서지역 무신란의 반란군 성격」, 『역사와실학』44, 역사와실학회, 2011
고수연, 「1728년 호남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담론』60, 호서사학회, 2011
고수연, 「『무신창의록』을 통해 본 18,19세기 영남남인의 정치동향」, 『역사와담론』65, 호서사학회, 2013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원인」,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고영진, 「호남남인 윤선도의 관계망」, 『민족문화연구』8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上·下, 국사편찬위원회, 1973
권기석,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태학사, 2011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권진호, 『19세기 영남학파의 종장 정재 류치명의 삶과 학문』, 한국국학진흥원, 2008
김백철, 「山林의 徵召와 出仕: 朴世采의 辭職疏를 중심으로」, 『규장각』3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김백철, 「英祖의 義理明辯書 『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 : 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정신문화연구』3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김백철, 「'탕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상, 태학사, 2011
김백철, 「영조만년의 초월적 권위와 '大蕩平'」, 『역사학보』214, 역사학회, 2012
김백철,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태학사, 2014

김백철, 「정조초반 『명의록』과 왕권의 위상: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상의 경계」, 『대동문화연구』9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2016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경인문화사, 2016
김백철, 「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 『규장각』4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김백철, 「 『천의소감』의 서사구조와 명분론」, 『천의소감』, 한국고전번역원, 2017
김백철, 「정조 6년(1782) 윤음의 반포와 그 성격: 송덕상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7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9
김백철, 『왕정의 조건: 담론으로 읽는 조선시대사』, 이학사, 2021
김봉곤, 「영남남인 하대관의 가문 계승의식과 향촌 사회활동」, 『남명학연구』58,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김세용, 「조선시대 읍호승강에 대한 일고찰: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림』42, 수선사학회, 2012
김세용, 「조선후기 지방통치정책과 읍호승강: 17세기를 중심으로」, 『사림』46, 수선사학회, 2013
김선주, 「조선후기 평양의 '사족'」, 『국학연구』27, 한국국학진흥원, 2015
김선주(김범 역), 『조선의 변방과 반란, 1812년 홍경래의 난』, 푸른역사, 2020
김성우, 『조선시대 경상도의 권력중심이동』, 태학사, 2012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임오화변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43, 부산경남사학회, 2002
김영진, 『조선후기 당파보 연구(2): 『남보』」, 『대동문화연구』9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김윤조, 「18세기 영남과 기호소론가의 학문과 문학교류」, 『한국학논집』5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김인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문과급제자 연구』, 안동대 사학과 박사논문, 2019
김학수, 「갈암 이현일 연구: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4, 조선시대사학회, 1998
김 호, 「記憶, 敍事 그리고 歷史大衆化: '正祖毒殺說'과 茶山 丁若鏞」, 第16回韓日歷史家會議, 東京, 2016.11.04.-06.

김 호,『조선왕실의 의료문화』, 민속원, 2017
남하정(원재린 역), 『동소만록』, 2017
노혜경,「18세기 한 영남남인의 관직생활: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다카하시 도루(조남호 역),『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도광순 편,『영남학파의 연구』, 병암사, 1998
마르티나 도이힐러(김우영 외역),『조상의 눈 아래서』, 너머북스, 2018
문경득,「영조대 무신란 관련 변산적의 성격」,『한국사학보』63, 고려사학회, 2016
박 경,「18세기 기사남인의 복관작 청원을 통해 본 격쟁의 정착: 목래선, 이현일 후손들의 복관작 청원을 중심으로」,『사총』86,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5
박광용,「탕평론과 정국의 변화」,『한국사론』1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박광용,『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4
박병련 외,『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박창희,『영남대로 스토리텔링』, 해성, 2012
박홍갑,『우리 성씨와 족보이야기』, 산처럼, 2002
백승호,「정조연간 남인 문단과 지성인의 결속」,『한국문화』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서울대 도서관 편,『국조인물고』상·중·하, 서울대출판부, 1992
손계영,「『性齋先生文集刊所用下記』를 통해 본 19세기 후반 문집 간행과정과 간행비용 분석」,『고문서연구』46, 한국고문서학회, 2015
손대현,「윤기의 작품에 나타난 과폐 비판의 양상과 근기남인의식의 형상화」,『어문학』141, 한국어문학회, 2018
손혜리,「한문학을 통해 되돌아보는 차별과 배제의 역사」,『한국한문학연구』76, 한국학문학회, 2019
송준호·송만호 편저,『조선시대 문과백서(상): 태조-인조』, 삼우반, 2008
신승운,「조선조 정조명찬 인물고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 도서관학과 석사논문, 1987
안장리,『조선국왕 영조 문학연구』, 세창출판사, 2020
오갑균,「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역사교육』21, 역사교육연구회, 1977
오갑균,「분무공신에 대한 분석적 연구」,『논문집』21, 청주교육대, 1984.
오수창,『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청」, 『한국문화연구』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8
우인수, 「영조대 영남남인 류정원의 관계 진출과 관직생활」, 『대구사학』140, 대구사학회, 2020
우인수, 『조선후기 영남남인 연구』, 경인문화사, 2015
유봉학, 「18세기 남인분열과 기호남인 학통의 성립: 『동소만록』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1, 한신대출판부, 1983
원재린, 「영조대 후반 소론-남인계 동향과 탕평론의 추이」, 『역사와현실』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원재린, 「『동소만록』에 반영된 남하정의 정국인식」, 『역사와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관직진출양상」, 『조선시대사학보』43, 조선시대사학회, 2007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중시급제자 연구」, 『역사와실학』39, 역사실학회, 2009
원창애, 「문과방목에 담긴 양반사회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시민강좌』46, 일조각, 2010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양상」, 『조선시대사학보』57, 조선시대사학회, 2011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직부제 운영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17, 경북대 영남학연구원, 2010
이근호, 「석전 광주 이씨 가문과 근기남인의 제휴」, 『한국학논집』5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4
이근호, 「조선후기 남인계 가문의 정치사회적 동향」, 『역사와담론』69, 호서사학회, 2014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 민속원, 2016
이선아, 「18세기 호남의 노론계 서원과 평해황씨」, 『전북사학』54, 전북사학회, 2018
이성학, 「韓國古邑의 置廢 및 名號陞降: 變遷攷」, 『사회과학』3,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1984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출판부, 2003
이승재, 「채제공 『정원록』연구」, 『한문학논집』50, 근역한문학회, 2018[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23, 역사실학회, 2002
이 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42, 고려사학회, 2011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 영남의 정희량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2, 부대사학회, 1971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국학자료원, 2004
이중환(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3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운동과 추숭사업」, 『대구사학』117, 대구사학회, 2014
이재현, 「순조대(1800-1834) 안동지역 유림의 정치적 동향」, 『퇴계학과 전통문화』59,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6
이종범,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연세대 사학과 석사논문, 1984
이태진, 「'당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6
이태진, 「정조의 『대학』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92
임승표, 『朝鮮時代 賞罰的 邑號陞降制 硏究』, 홍익대 사학과 박사논문, 2001
장유승, 『 「필원산어』연구: 영남남인 정체성과 문학사 인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근역한문학회, 2020
정경희, 「17세기 후반 '전향노론' 학자의 사상: 박세채·김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정만조, 「영조 14년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시비」, 『한국학연구』1, 동덕여대 한국학연구소, 1982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정재용, 「18세기말-19세기초 의리문제를 둘러싼 안동지역 남인과 노론의 대립」, 안동대 사학과 석사논문, 2016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훼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171, 한국사연구회, 2015a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2, 조선시대사학회, 2015b
정필준, 「1860-1870년대 근기남인의 내부갈등과 동향」,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2015
정해은, 『조선의 무관과 양반사회』, 역사산책, 2020
정호훈, 『朝鮮後期政治思想硏究: 17세기 北人系 南人을중심으로』, 혜안, 2004
조강희,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 경인문화사, 2006
조준호, 「18세기전반 근기남인의 분포와 무신란」, 『성호학보』3, 성호학회, 2006
조찬용, 『1728년 무신사태 고찰』, 아이올리브, 2003
조찬용, 『1728년 무신봉기와 300년 차별』. 학고방, 2012
진창일, 「물난리에 죽은 소 500마리…"200만원도 못받고 죽인다"」, 『중앙일보』, 2020.09.10.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1999
차세영, 『조선의 인사임용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유교적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논문, 2018
차장섭, 『조선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1997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한국서원학보』4, 한국서원학회, 2017
채광수, 「1728년 무신난과 居昌 褒忠祠건립의 성격」, 『역사교육논집』70, 역사교육학회, 2019a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8, 한국서원학회, 2019b
채광수, 「영남 소론계 가문의 존재와 계승 양상: 봉화 진주강씨 姜恪 가문을 중심으로」, 『대구사학』139, 대구사학회, 2020
최석기, 『조선후기 경상우도의 학술동향』, 경인문화사, 2019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9
최우혁, 「정조-순조대 근기남인의 분화와 정치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90,

조선시대사학회, 2019
弊源坦,『韓國政爭志』, 三省堂, 1907
河謙鎭 編,『慶尙道案』Ⅰ-Ⅱ, 아라, 2013
허태용,「1728년 무신란 진압과 『감란록』의 편찬」,『한국사연구』166, 한국사연구회, 2014
허태용,「영조대 탕평정국하 국가의리서 편찬과 무신란 해석:『감란록』,『어제대훈』,천의소감』의 비교검토」,『사학연구』116, 한국사학회, 2014
황재문,「1728년 무신란 관련 문헌의 재검토」,『국문학연구』40, 국문학회, 2019

Abstract

The reality and the illusion of the 18th century Yeongnam "Rebellion" Discourse

Kim, Paek-chol

In Gyeongsang Province,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in Yeongnam is being accepted as a historical fact. Several political events are often suggested as an opportunity for Southern party to be expelled from the political world of the capital. For instance, Gabsul Regime Change in 1694, Musin Rebellion in 1728, Sinyu Persecution of Catholics in 1801 etc.

However, Gyeongsang Province has the largest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in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for 500 years excluding Seoul. What's more, Those belonging to Southern party were sometimes suppressed, but those from Gyeongsang Province were not targeted.

Then, why did the theory of the Yeongnam discrimination arise? First, it is a relative memory distortion phenomenon. Despite various political events,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 Yeongnam did not actually decrease or stop. Even during the power politics and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number of Yeongnam people entering government posts increased.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reality from the view of discrimination.

Second, the number of Yeongnam people who passed temporarily fluctuated. In the 18th century, some of successful candidate for Yeongnam decreased briefly. And from the 18th to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 for Chungcheong and Pyeongan provinces temporarily surpassed that of Gyeongsang Province.

But this was also due to increased travel to the region along with other people's regulations. However, this was also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posts in Gyeonggi and Hoseo Province along with the use of Southern party. And the expansion of the use of Northwesterners was related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Yeongnam people, so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discrimination in Yeongnam. Rather, fair personnel policies and balanced regional policies have ironically reduced the number of Yeongnam people entering government posts.

Third, it is a way of projec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from a current perspective on past history. This is a frequent phenomenon in local political circles, mainly in relation to the election season.

As a result, Gyeongsang Province has rarely suffered regional discrimination. Yeongnam produced the most famous talents and was a very economically wealthy area. Just because they dream of Seoul, they feel thirsty in proportion to their desire.

keywords :
Yeongnam discrimination, Musin Rebellion in 1728, party membership, clan, memory distortion.